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26년 4월 19일(일) - 4월 25일(토)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자: 양은모 부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26년 4월 19일(일) ~ 2026년 4월 25일(토) (5박 7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양은모

4. 출장목적:

- (1) 2026년 제55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회의 참석 → 글로벌 지역정책 동향 분석
- (2) 제39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참석 → 글로벌 지역정책 동향 분석
- (3) 지역정책 전문가 면담 → 정책제언 및 시사점 도출
- (4) 프랑스 도시정책 사례 현장 견학 → 주요국 사례 수집

5. 주요 목표:

- ‘글로벌 지역정책 동향 분석 및 정책 제언 마련 연구’ 과업 수행을 위해 OECD RDPC 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별 지역정책 관련 발제 및 토론을 참관하고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
- 도시, 비도시, 지역정책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 경험과 정책 사례를 수집
- 한국 대표단(국토교통부) 회의 발표에 대한 자문을 수행

6. 출장의 기대효과:

- OECD RDPC 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지역정책 이슈 및 전략적 방향을 체계적으로 파악
- 국제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최신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지역정책 동향 분석 및 정책 제언 마련 연구’ 과업 수행을 위한 시사점 도출
- OECD 국제회의에서 지역정책 관련 한국 대표단의 발의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역할 공고화

7. 한국대표단 및 지원인력 구성

(1) 국토교통부: 8인

- 이주열 국장(정책기획관)
- 권유정 과장(국제협력통상담당관)
- 김종성 과장(신도시정비지원과)
- 박상우 사무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 박정규 사무관(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실)
- 한준수 주무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 정예은 주무관(도시활력지원과)
- 문성윤 자문관(국제협력동상담당관)

(2) 국토연구원: 1인

- 양은모 부연구위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3) 주OECD 대표부: 1인

- 김남균 참사관(주OECD대표부)

(4) OECD 사무국: 1인

- 이랑 과장

II. 출장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2026년 4월19일(일)	인천	파리	(10:05) 인천 출발(OZ501) (17:20) 파리 도착	
4월20일(월) 10:30~13:30 15:30~18:00	파리 OECD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책 전문가 인터뷰 - 중장기 OECD RDPC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Ms. Soo-Jin Kim, OECD) 	
	파리 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단 OECD 의제 사전점검 - 출장단 업무분장 - 인력별 지원할 회의 결정 - 국토부 발의내용 작성/검토 - OECD 대표부 및 사무국 인력 점검 - 회의장 위치, 이동 동선, 회의 일정 점검 	
4월21일(화) 09:00~18:00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 개회 세션 - 2027-2030년 RDPC 사업계획 및 예산을 위한 도시정책 우선과제 - 주택인가 자산인가? 도시 내 양질의 적정가격 주택 공급 방안 -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은 실제로 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는가? - 도시의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연기반해법 도입의 편익과 미이행 비용은 무엇인가? - 실행지향적 OECD 정책도구는 현장 중심 도시정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 국가도시정책의 새로운 정책 영역 - 네트워킹 행사 	
4월22일(수) 09:30~18: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1일차) - 개회 세션 - RDPC 2027-2030년 업무계획 및 예산 초안 - 지역발전, 안보 및 국방 - OECD 내 지역발전: 전환 관리, 지역 격차 및 정책 간 상충관계 -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Compass 및 OECD-유럽지역위원회 조사 결과 - 네트워킹 행사 	
4월23일(목) 09:30~18: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2일차) - 개회 세션 - 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 지방정부 간 협력 활용 - 기후회복력을 위한 물 거버넌스 - 부동산 회복력 - 지역 회복력 및 재난관리 - 네트워킹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책 전문가 인터뷰 - 중장기 OECD RDPC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Ms. Maria Varinia Michalun, OECD) 	
4월24일(금) 09:00~11:30	앙드레 씨트호엥 공원(Parc André Citroën)		○ (현장 견학) 프랑스 도시정책 사례: 도시재생	
	파리		(19:10) 파리 출발(OZ502)	
4월25일(토)		인천	(14:10) 인천 도착	

주: 출장일정 검증자료(항공권)는 부록 참조

III. 수행사항

지역정책 전문가 인터뷰

1. 회의명

- 지역정책 전문가 인터뷰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0일 (월), 10:30 ~ 13:30
-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3. 참석자

- Ms. Soo-Jin Kim (Deputy Head of the Cities, Urban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 OECD)
- 양은모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4. 회의 목적

- (목적) ‘글로벌 지역정책 동향 분석 및 정책제언 마련 연구’의 과업 수행의 일환으로,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제언 마련을 목적으로 OECD 본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함
 - 인터뷰 결과는 OECD RDPC 한국대표단의 전략적 대응 방향 및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5. 주요 논의내용

- 한국대표단은 OECD RDPC 회의 내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표단 중 하나로 평가되며, 향후 역할 확대와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됨

- 하지만, RDPC 회의 참석 대표단 구성이 회차별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타 국가 대표단과 비교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존재함
- 한국 대표단은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의 준비를 철저히 수행하는 대표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유럽 국가 대표단의 경우, RDPC 본회의 이전에 유사 분야 관련 및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정보 교환과 의견 조율을 진행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 교환 및 네트워크 측면에서 한국대표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음
-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최근 관심을 두기 시작한 분야(예를 들어,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스마트 시티 등)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미 정책적 대응 경험과 사례를 축적해 온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제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 수행을 기대함
- 향후 국토교통부의 OECD 파견 인력 및 자원 지원을 기반으로, OECD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

지역정책 전문가 인터뷰

1. 회의명

- 지역정책 전문가 인터뷰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3일(목), 17:00 ~ 18:00
- OECD 본부(프랑스 파리)

3. 참석자

- Ms. Maria Varinia Michalun (Head of Unit, CFE, OECD)
- 양은모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4. 회의 목적

- (목적) ‘글로벌 지역정책 동향 분석 및 정책제언 마련 연구’의 과업 수행의 일환으로,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제언 마련을 목적으로 OECD 본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함
 - 인터뷰 결과는 OECD RDPC 한국대표단의 전략적 대응 방향 및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5. 주요 논의내용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의 주요 역할과 목적은 지역개발 분야의 지식 교류를 지원하고 국제적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RDPC는 회원국 간 정책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역정책 논의를 선도하는 국제 협력체라는 의견이 제시됨
- OECD RDPC 회의를 통해 형성된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는 정책 및 연구 수행에 매

우 큰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실제 RDPC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정책 및 연구 과정에서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회의를 통해 추가 정보 획득, 후속 연구 주제 발굴, 우수사례 탐색, 행사 및 컨퍼런스 연사·실무 전문가 섭외 등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논의됨
- 즉, RDPC 참여가 단순한 회의 참석을 넘어 정책 및 연구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OECD RDPC 내 국제 논의에 매우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국 대표단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가 제안됨. 단순한 회의 참여를 넘어 OECD 및 회원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정책 담론 형성과 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RDPC 내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조직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국 대표단이 RDPC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로는 다층적 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인구구조 변화 (demographic change), 지역 경쟁력 (competitiveness) 등이 제안됨

출장단 OECD 의제 사전 점검회의

1. 회의명

- 출장단 OECD 의제 사전 점검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0일 (월), 15:30 ~ 18:00
- 출장단 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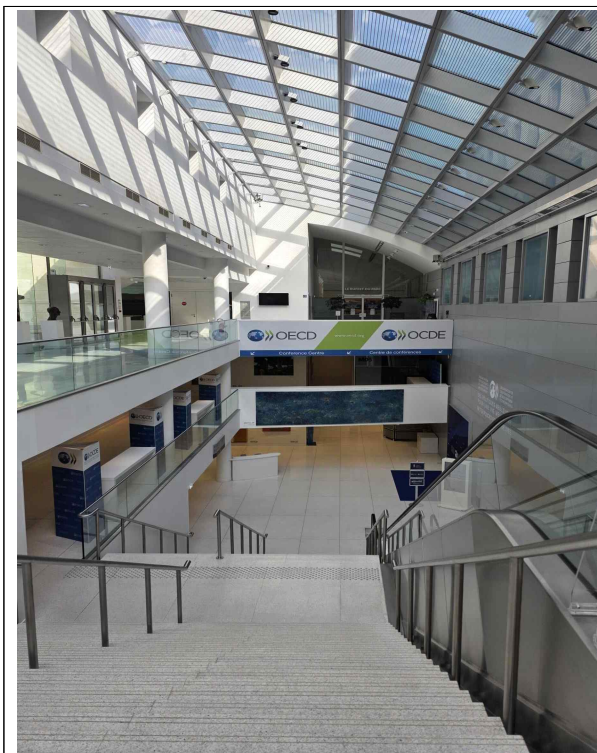
3. 참석자

- 양은모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4. 주요 논의내용

- 출장단 업무분장: 발언 및 토론, 한국 대표단석 배석
 - 정예은 주무관: 제39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4월21일 화요일)
 - 김종성 과장: 제35차 비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4월21일 화요일)
 - 이주열 국장, 권유정 과장, 박상우 사무관: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1일차 (4월22일 수요일)
 - 이주열 국장, 권유정 과장, 박상우 사무관: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2일차 (4월23일 목요일)
- 국토연구원 자문 및 지원 업무, 회의 일정별 발언 및 토론 전략 논의
 - 제39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4월21일 화요일)
 - 집인가 자산인가? 도시 내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 제공
 -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은 과연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가?
 -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연 기반 접근 미도입시 발생하는 비용편익

- 제35차 비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4월21일 화요일)
 - 지방정부 간 협력 활용
 - 경제분야 - 비도시발전을 위한 광업, 데이터센터, 관광 분야의 혁신
 - 사회분야 -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
 - 비도시 - 도시 연계와 주택: 비도시발전을 위한 기회
-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4월22일~23일 수요일~목요일)
 - RDPC 2027-2030년 업무계획 및 예산(PWB) 초안
 - OECD의 지역발전: 전환, 격차, 정책적 상충관계의 관리
- 주오이씨디 대표부 및 OECD 사무국 참석 인원 및 지원 내용 협의
- 회의장 위치 및 시간대별 이동동선 점검
- 회의 내용 기록을 위한 업무 분장 협의
- OECD 한국인 직원들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 방안 논의
- 이혜진 박사(Economist, EDS,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 윤지수 정책분석관(Junior Policy Analyst,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 OECD 본부



▲ OECD WPURB 참석자

제39차 도시정책(Urban Policy)작업반 회의 (WPURB)

1. 회의명

- 제39차 도시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1일(화), 9:30 ~ 18:00
- OECD Room CC7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정예은 주무관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2027-2030년 OECD RDPC 업무계획 및 예산(PWB)을 위한 도시정책 우선과제
- 주택인가 자산인가? 도시 내 양질의 적정가격 주택 공급 방안
-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은 정말로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는가?
-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해 도시 내 자연 기반 접근 미도입시 발생하는 비용편익
- 실행 중심의 OECD 정책도구(Tools)가 실제 도시정책의 현장적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 국가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1] 개회 (09:30-9:45)

- WPURB 의장
 - WPURB 의장 Ms. Karen van Dantzig 의 주재로 제39차 도시정책작업반(WPURB) 회의가 개최됨
 - 본 제39차 도시정책작업반(WPURB) 회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도시정책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최됨
 - 현대 도시정책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주택 공급의 민주적 정의, 디지털 전환(AI)의 거버넌스 신뢰성, 그리고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이번 회의는 정책 수립과 현장 집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를 위한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자 함
-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국장인
 - OECD 국장 Lamia Kamal-Chaoui가 최근 주요 활동과 도시정책작업반 운영 권한(Mandate) 갱신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또한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및 WPURB가 CFE와 OECD 전체 업무에 기여한 내용을 설명함
- 회의 결과 요약*
 - * WPURB 회의 주제별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함
 - 첫째, 주택의 민주적 가치 복원: 주택을 단순한 금융 자산(Asset)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인 거주 공간(Home)으로 재정의하고, 세대 간 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를 바탕으로 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에 합의함
 - 둘째, 신뢰 기반의 AI 거버넌스 정립: AI 기술 도입의 핵심은 '기술적 우위'가 아닌 '거버넌스 준비도(Readiness)'에 있음을 확인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벤더 종속(Vendor lock-in)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활용을 확정함
 - 셋째, 현장 중심의 실행 툴킷(Action Toolkits) 강화: 중소도시의 잠재력 해제, 포용적 성장 로드맵, 그리고 타 도시 우수사례의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기술이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거버넌스와 포용적 비전이 도시를 만든다"는 것임. 특히 주택 위기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사회적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민주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음. 고령화로 인한 기존 주택 재고의 정체와 대도시

로의 인구 집중이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자산의 고착화’ 현상은 도시 정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 결국 도시의 미래 경쟁력은 첨단 기술의 도입 속도가 아니라, 기술과 자산이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성숙도에서 결정될 것임. 이러한 거시적 논의를 고려한 주택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함

(2) [Item 2] 2027-2030년 OECD RDPC 업무계획 및 예산(PWB)을 위한
도시정책 우선과제 (09:30-9:45)

- WPURB 의장
 - OECD 사무총장이 제시한 2027-2030년 업무계획 및 예산(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 수립을 위한 OECD 차원의 우선과제와, 2026년 1월 종료된 RDPC 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국이 마련한 2027-2030년 RDPC PWB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토론 질문1)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위기에 당신의 국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불확실성·충격·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 각국은 지정학적 긴장(우크라이나, 중동 사태 등),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기후 변화(홍수, 폭염, 산불 등)가 중첩된 다중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탄력적(Resilience-oriented)이고 장소 기반(Place-based)적인 접근을 강화하고자 함
 - 크로아티아: 지진, 에너지 위기,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EU 결속 기금(Cohesion policy) 및 회복 기금을 활용하고 있음. 특히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통합 영토 투자(ITI) 메커니즘’을 통해 장소 기반 및 회복탄력성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환함
 -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인구 통계학적 압박, 에너지 전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적응력 높고 다층적인 거버넌스와 장소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에스토니아: 지정학적 안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방 및 안보 관련 투자를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동부 국경 지역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슬로베니아: 2023년 대홍수 이후 자연기반해법(NbS)을 도시에 도입하여 홍수 방지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 대응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해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영국: 에너지 충격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 및 주택의 탈탄소화 필요성이 커졌으며,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 중임
- (토론 질문2) RDPC 업무계획 및 예산(PWB) 초안은 당신의 국가에서 주요 도시정

책 우선과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는가?

- 대다수 회원국은 PWB 초안이 주택, 인공지능(AI) 및 디지털화, 인구 구조 변화, 경쟁력 강화 등 국가별 주요 우선과제를 훌륭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미국: 주택 분야와 관련하여, 탈탄소화나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규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장벽 완화, 소유 비용 절감, 보험 가입성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각국의 발전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SDGs'나 '기후' 같은 포괄적 용어 사용과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지양하고 경제적 영향 분석에 집중하고자 주장함
- 불가리아 & 폴란드: 중소도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메트로폴리스 외의 중소규모 도시(Small and medium-sized cities)에 대한 관심과 지방 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 도농 연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함
- 영국: 과거 데이터 측정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센터가 도시 구조와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 미래의 동태적 변화를 측정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함
- 네덜란드: 경제 및 기후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민주적 회복탄력성(Democratic resilience)'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함
- 에스토니아: 안보 문제가 중요한 만큼, 주택분야 관련 항목에서 안보 및 지정학적 영향과 관련된 결과물이 더 많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 (토론 질문3) 2025년 12월 개최된 지난 WPURB 회의 이후, 당신의 국가에서 추진된 도시정책 관련 개혁·정책 이니셔티브·주요 논의 중 향후 PWB 수립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여러 국가에서 향후 PWB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대대적인 국가적 개혁과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추진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2025년 12월, 모든 규모의 도시에 대한 지원을 간소화하고 정책 입안 시 도시의 이익을 통합하기 위한 "EU 도시, 민간 성장 및 번영 의제(EU Agenda for Cities, Private Growth and Prosperity)"를 채택했으며, 'EU Cities portal'을 출범했다는 사실을 공유함
 - 영국: 중앙정부의 권한을 도시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Devolving powers) 작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잉글랜드 지역에만 1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크로아티아: 국가-지역-지방 정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도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발전법(Regional Development Act)' 제정의 최종 단계에 있음
 - 일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 유산과 경관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함

- 캐나다: 주택 시스템의 전반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주택 계획(Canada Housing Plan)'을 시작했으며, 저렴한 비시장성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연방 기관인 'Build Canada Homes'를 출범함
- 에스토니아: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050 공간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연내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2028년 이후 EU 재정 기간에 대비해 중소도시를 강화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임
- 불가리아: EU 기금 분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으로서, 수도인 소피아(Sofia)를 자체 전략을 가진 독자적인 지역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함
- 네덜란드: 주택, 인프라, 자연경관 등의 개발과 제한된 공간 활용 지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공간 계획 문서를 준비하고 있음

(3) [Item 3] 주택인가 자산인가? 도시 내 양질의 적정가격 주택 공급 방안 (11:00-12:00)

● WPURB 의장

-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지역사회 구조 변화, 그리고 누가 어디에 거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주택의 금융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적정가격 주택 공급 부족과 기후 적응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적정가격·양질·회복력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번 세션에서는 단순히 "더 많은 주택 공급"이라는 획일적 접근을 넘어,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맞추어 주택시장을 재조정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접근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부동산 투자와 혁신적 공급 모델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OECD 연구가 도시 주택 시스템 재설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함
- 글로벌 주택 위기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결속과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전략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음. 주택이 주거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산 축적 수단'으로 치중될 때,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는 주택 정책에 있어 '세대 간 연대'를 필수적인 핵심 가치로 평가받음
 - 인구 구조 및 수요 변화: 현재의 주택 위기가 '사망하지 않는 고령층'에 의해 주택 순환이 정체되는 현상과 대도시로 집중되는 청년층의 수요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민주적 갈등'임을 지적함. 이는 자산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 위기를 풀

수 없음을 시사함

- 부동산 회복력: 글로벌 부동산 자산가치는 약 111조 달러로 OECD GDP의 약 2배 (196%) 규모임.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와 폭염 등 물리적 위험은 이 거대한 자산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현지화된 회복력 (Localized Resilience)’ 데이터 구축이 시급함
- 빈집세 도입 및 단기 임대 규제를 통해 유휴 주택을 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존 주택 재고의 유통화를 촉진시키거나, 비용 기반 임대 모델 등 비영리/협동조합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음. 또한, 기후 위험을 반영한 건축 표준 정립 및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미래 대비형 주택 마련도 필요함
- 국가별 대표단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칸 드림’ 재건을 위해 행정명령 14376호 (2026년 1월) 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주택 잠식을 제한하고, 2026년 3월 13일 행정명령으로 건설 규제 장벽 제거와 지역 은행 (자산 300억 달러 미만) 을 통한 모기지 접근성 확대를 추진 중임
 - 프랑스: 도시 재생 기금 (En Rue) 을 140억 유로에서 400억 유로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직원 주택 공급 의무화 및 임대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 기반 조세 혜택 모델을 시행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모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네덜란드는 주택 협회가 전체 주택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25% (빈의 경우 시장 점유율 대폭 확대) 를 차지함. 특히 빈 (Vienna) 의 비용 기반 임대 모델은 임대료를 사적 시장 대비 약 20% 낮게 유지하는 성과를 거둠
 - 한국: 서울권 중심의 공공 주도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며, 생애 첫 구매자 대상 LTV 우대 (최대 80%)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
- 각국은 주택을 금융 자산에서 시민의 권리인 ‘거주 공간’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동시에, 도시의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주거 공간이 직면한 기후 위험과 복잡한 수급 문제를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해, 향후 디지털 기술과 AI를 활용한 도시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토론 질문1) 주택의 금융화는 도시 내 지리적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 주택의 금융화로 인해 고수익을 노리는 자본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도시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커지고 단기 임대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 내 장기 거주용 주택의 가용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신용 대출과 연계된 투자 자산으로 취급됨에 따라,

- 사람들은 입지가 좋고 적당한 가격의 질 좋은 주택에 거주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짐
- 이러한 현상은 지역 공동체의 구성을 재편하고, 누가 어디에 거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도시 내 일자리, 주요 공공서비스 및 다양한 기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과 분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토론 질문2)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적절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가?
 -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획일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합하도록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과감한 정책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신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신규 주택 건설과 적정가격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 인허가 절차 및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외 지역의 계획적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복합 개발(TOD)을 활성화하여 주택 공급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 기존 주택 재고의 효율적 활용: 빈집세 부과, 빈집 등록제, 단기임대 제한 등의 제도를 통해 유휴 주택이 시장에 재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활용한 노후주택·빈집 정비, 상업용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다운사이징(Downsizing) 유인 제공 등을 통해 기존 공간 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공간계획과 연계된 장기 전략 마련: 주택정책을 국토 및 도시 공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공공토지의 전략적 활용과 함께, 주택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의료 등 핵심 서비스와 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을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 (토론 질문3) 당신의 국가에서는 도시 내 적정가격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 여러 국가들은 각국의 제도적·시장적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주거 안정화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확대가 일반 가구의 주택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 제한 논의와 함께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역은행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통해 모기지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 한국: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최대 3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취약계층 우선 배정, 생애최초 구입자 및 저소득층 대상 LTV 규제 완화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 일본: 청년 및 양육가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노후 주택단지에 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을 현대적 주거공간으로 개보수하여 시장에 재공급하는 정부 주도의 실용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
- 네덜란드: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 규제와 함께 지방정부에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아울러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주민·주택협회·학교 등이 참여하는 통합형 투자 프로그램인 ‘국가 거주성 및 안전 프로그램 (National Program for Livability and Safety)’을 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제 및 각종 규제 장벽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주택 가속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시장형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연방기관 설립과 함께, 협동조합 등이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 보호 기금(Rental Protection Fund)’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토론 질문4) 사회적경제 조직, 커뮤니티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s), 주택 협동조합(housing co-operatives) 등 혁신적 주택 공급 주체들은 도시 주택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 혁신적 주택 공급 주체들은 단순한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환경적 가치 실현을 우선 시하고, 발생한 잉여금을 다시 주거 목적에 재투자하며,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기존 시장 중심 주택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
 - 제한적 이윤(Limited-profit) 주택협회: 건설 및 운영에 투입된 실제 원가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민간 시장 대비 약 20% 이상 낮은 수준의 안정적 임대료를 유지함(예: Vienna)
 - 주택협동조합(Housing Co-operatives): 조합원에게 거주권과 의사결정 참여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 대비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거나,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함(예: Zurich, Tokyo).
 - 커뮤니티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s, CLT): 지역사회를 대신해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토지를 소유·관리하고, 거주자는 건축물만 소유하는 구조를 통해 토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노력함. 또한 공공지원기금 및 저리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시장가격 대비 약 40% 저렴한 주택 공급 사례도 있음(예: Brussels)
 - 이러한 혁신적 주체들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노숙 문제 완화뿐만 아니라, 건설·관리 과정에서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창출함
 - 이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은 혁신적 주택 공급 주체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전용 법·제도

마련, 공공토지의 장기 사용권 제공, 전용 금융지원체계(예: 임대 보호 기금) 구축,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Item 4]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은 정말로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는가?
(12:00-13:00)

- WPURB 의장
 - 많은 국가 및 지방정부들은 도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솔루션과 디지털 기술(도시 디지털 트윈 기술 포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 그러나 다양한 시범사업과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도시의 실질적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함
 - 이번 세션에서는 디지털화와 AI가 도시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대표단과 함께 재검토하고,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자 함
 - 또한 도시의 AI 활용 준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자가평가 도구(AI readiness self-assessment tool) 개발과 도시 디지털 트윈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등 OECD의 관련 연구가 도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 성과를 가져오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함
- 도시의 ‘지능화(Smartness)’는 단순한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AI는 단순히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수단을 넘어, 인간과 자연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시뮬레이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회복력 있는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함
- AI for Future Cities: AI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도시 설계 시나리오를 직접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연 시스템 등 비인간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환경적 회복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정책 도구로서의 AI 활용 방향을 제시함
- OECD AI Readiness Self-Assessment Tool: 기술(technology), 조직(organisation), 정책·제도적 맥락(context) 등 3대 차원을 기반으로 도시의 AI 활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개발 중임. 특히 벤더 종속(vendor lock-in)과 기술 부채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단순한 ‘혁신 전시 행정(innovation theatre)’ 수준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AI 도입을 지원하고자 함

- 도시 디지털 트윈(Urban Digital Twins): 일본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가상공간 내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효과를 시각화·분석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2027년 1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여 도시 디지털 트윈 활용과 관련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임
- 국가별 대표단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서울시의 AI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 운영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AI 기술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함
 - 일본: 일본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Plateau'를 활용하여 아직 건설되지 않은 건축물의 조망권과 일조량 등을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 분양 과정과 시민 소통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공유함
 - 독일: 혁신 공모를 통해 130건 이상의 AI 응용 사례를 접수하고, 이 중 9개의 대표 유스케이스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특히 Bamberg시는 드론 및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녹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도시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로 평가받음
 - 영국: 데이터 표준화와 오픈소스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AI는 도시정책의 최종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정책 판단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자'로 활용되어야 하며, 모든 AI 활용은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함
- (토론 질문1) 도시들이 점차 AI를 핵심 시스템에 내재화면서 도시 운영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 민간 공급업체(vendors), 기반 인프라에 대한 의존성과 취약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가? 정부는 기술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기능하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도시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
 - 위험과 취약성 심화: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AI 및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투명성과 인간의 감독이 결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감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데이터 파편화와 특정 민간 공급업체에 대한 기술 종속 문제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논의됨
 - 기술적 최적화의 한계: 전문가들은 기술과 AI가 단순한 속도 및 비용 효율성 중심의 최적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인간 발전과 공공 가치라는 근본적 목표를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정책적 대응과 교훈:

- * 영국: AI가 최종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궁극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소재를 지역사회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 * 한국: 정보 불평등과 기술 의존성 등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 일본: 실제 데이터와 AI가 생성한 정보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른바 ‘환각’ 현상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함
- *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한 기술적 준비 수준을 넘어, 벤더 통제력·감사 가능성·투명성을 포함한 ‘거버넌스 준비성 (governance readiness)’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토론 질문2) 당신의 국가에서 AI 준비도 자가진단 도구(AI readiness self-assessment tool)의 시범 적용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도시는 어디인가?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브레다(Breda)와 헤이그(The Hague) 두 도시가 정책 시범 적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후보 도시라고 공식적으로 추천함

- (토론 질문3) 당신의 국가에서는 도시 디지털트윈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입·활용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출된 교훈 중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여러 국가들이 이미 공간계획 및 정책 실험·검증을 위해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주요 교훈으로 제시됨

- 일본: ‘플래토(Plateau)’ 라는 디지털트윈 모델을 주거 개발 분야에 적용하여, 시민과 주택 구매자가 일조량, 조망권 등 미래의 거주 환경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해당 시스템은 현재 약 300개 도시에 도입되어 있으며, 향후 500개 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임. 또한 일본 측은 정부 단독으로는 높은 수준의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정부 공무원과 적극적인 민간 개발업체 간 협력이 성과 향상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함

- 영국: 특정 시간대(예: 비가 오는 날 아침 출근 시간)의 도시 상황을 시뮬레이션·분석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Connected Places Catapul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를 영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음. 또한 영국 측은 기술 자체보다 모델에 투입되는 데이터의 일관성, 개방형 데이터 표준(open source data), 그리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주요 교훈으로 제시함

- 네덜란드: 사회·공간적 과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해 정부 부처 주도로 ‘지역 디지털트윈 네트워크(Regional Digital Twin Network)’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또한 유럽

의 디지털트윈 인프라 협력체인 'Global Digital Twins, Cityverse'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경험과 정책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 프랑스: 약 6개월 전부터 디지털트윈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회원국들과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밝힘

(5) [Item 5]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해 도시 내 자연 기반 접근 미도입시 발생하는 비용편익은 무엇인가? (14:30-15:30)

● WPURB 의장

- 폭염부터 수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적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도시들은 도시 환경 개선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녹색 지붕(green roofs), 도시 숲(urban forests), 투수성 포장(permeable pavements) 등 자연친화적 접근(nature-positive approaches) 등 보다 효과적인 정책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음
- 이번 세션에서는 적극적인 환경정책 추진의 편익과 정책 미이행에 따른 비용을 분석하고, 도시계획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공유하고자 함
- 또한 자연친화도시(nature-positive cities)와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에 관한 OECD의 연구가 보다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적 압력이 도시경제와 시민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자연친화적 도시' 접근이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도시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논의됨

- 특히 자연 요소를 도시계획에 사전에 통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미이행 비용(costs of inaction)'이 매우 크다는 점이 강조됨
- 이에 따라 규제와 제도적 장치를 동반한 선제적 접근을 통해 도시 인프라 내 자연 기반 요소를 복원·확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핵심 과제로 제시됨

● 영국: 2024년부터 '생물다양성 순증가(Biodiversity Net Gain, BNG)'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대비 최소 10% 이상의 생물다양성 순증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자연 기반 요소를 개발사업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부지 내(on-site) 조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 외(off-site) 생물다양성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제도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약 5억 파운드 규모(약 77km²)의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30년간의 장기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의무화하였다고 설명함

- 헝가리: 홍수·가뭄·폭염 등 복합적인 환경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법」에 10개의 전략적 원칙을 신설하였다고 설명함. 구체적으로는 개발 면적의 최소 3% 이상을 녹지로 유지하도록 하고, 개발 구역 반경 500m 내 그린벨트를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지방정부의 녹색 인프라 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녹지 인증 제도를 함께 도입함
- OECD 사무국: 물 부족과 홍수로 인해 도시 GDP가 최대 12%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중심에 두고 기후·경제·시민 웰빙 편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자연친화적 도시’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또한 성공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명확한 비전 수립, 부문별 자연기반해법(NbS) 통합, 민간 자원 활용 확대,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5대 정책 권고와 함께 물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가별 대표단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일본: 내년 Yokohama에서 개최 예정인 ‘그린 엑스포(Green Expo)’를 통해 빗물 순환 정원 등 기후행동 및 자연 긍정 기반 혁신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또한 Chiba Prefecture에서는 가로수 식재와 벽면 녹화를 통해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함
 - 폴란드: 2025년 초 시행된 신규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구 2만 명 이상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녹화 전략 및 빗물 관리 개념을 포함한 ‘도시 기후 적응 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네덜란드: 무분별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비가역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 공간 계획 과정에서 수자원과 녹지 확보를 위한 공공 공간을 사전에 지정·보전하는 ‘녹색 청사진’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캐나다: 극한 기후와 재난으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92억 달러 규모의 보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언급하며, ‘자연 인프라 기금(Natural Infrastructure Fund)’을 중심으로 식수·우수 관리 인프라에 자연 기반 및 하이브리드 접근을 적용하여 도시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미국: 규제 중심의 자연기반해법(NbS)이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과도한 규제보다 혁신기술과 시장 중심 접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함
 - 한국: 다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함께,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폭우·폭염 등 기후위험에 대한 재난 취약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선행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예방 조치를 도시계획에 통합하도록 제도화함
 - 슬로베니아: 대홍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지역 내 산업시설 및 주거지 개발 제한을

강화함

- 핀란드: 촘촘한 녹색 네트워크 기반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음
- 모로코: 45개의 토지이용 지도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스펀지 도시(Sponge City)’ 기반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다수 국가의 정책 흐름상, 자연기반해법의 도입은 과거의 자발적 권고 수준을 넘어 강력한 규제와 법적 의무 사항(생물다양성 순증가 의무화, 기후 적응 계획 법제화 등)으로 격상되고 있음
 - 도시 내 녹지 확충이 보건비 절감, 부동산 가치 상승, 재난 피해 방지 등 뚜렷한 경제적 가치로 직결된다는 정량적 입증이 있음
 - 향후 도시 정책의 성패는 강력한 규제 집행력 확보와 함께 민간 부문의 투자를 견인할 명확한 금융 톨킷 제공, 그리고 교통·주택·수자원 등 다양한 부서를 아우르는 다층적 공간 계획 연계 역량에 달려 있음
- (토론 질문1) 당신의 국가에서 도시들이 반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주요하고 비용 부담이 큰 환경 위협은 무엇인가?
 - 각국 도시들은 기후변화와 연계된 물 관련 재난 및 이상기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캐나다: 홍수가 가장 빈번하고 비용 부담이 큰 재난으로, 매년 평균 약 8억 달러 규모의 보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산불, 대형 폭풍, 허리케인, 폭염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폭염은 가장 치명적인 재난 유형으로 언급됨. 2024년에는 약천후로 인한 보험 손실이 약 92억 달러에 달했으며, 보험 미가입 손실 규모는 약 240억~32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설명함. 아울러 2021년 11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대기의 강(atmospheric river)’ 현상으로 인해 고속도로와 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공유함
 - 헝가리: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극한 기상이 가장 중요한 환경위협이라고 설명함. 또한, 산사태, 사막화, 대규모 개발에 따른 토양 밀봉(soil sealing) 등 토양 황폐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겨울·여름철 전반적인 기온 상승, 폭염, 식생 건조, 산불, 모기 개체 수 증가 등의 복합적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음
 - 네덜란드: 도시 홍수와 도시 가뭄뿐 아니라 식수 부족 문제와 도시 열 스트레스가 주요 도시환경 위협으로 증가하고 있음
 - 슬로베니아: 극한 폭염, 홍수, 화재를 주요 기후위험 요소로 제시함
 - 한국: 한국은 도시들이 직면한 주요 기후·환경 위협으로 폭우, 가뭄, 폭염, 폭설을 제시함. 이러한 복합적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단순한 사후 복구 중심 접근을 넘어, 건축·교통·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

소중립(Carbon Neutrality)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 특히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폭우·가뭄·폭염·폭설 등 기후위험에 대한 재난 및 기후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해당 위험 수준에 기반한 예방 조치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 건축 부문에서는 신축 공공건물에 의무적 에너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면적 13,000㎡ 이상 대형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 교통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버스 노선 확대, 친환경 차량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 아울러 도시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흡수원(carbon sinks)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Cities)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무국: OECD 사무국은 OECD 회원국 내 홍수로 인한 도시 재산 피해 규모가 연간 약 1,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함. 또한 물 부족 현상은 도시 GDP 성장률을 최대 12%포인트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등 복지 비용은 OECD 국가 GDP의 약 2.4% 수준에 이른다고 언급함
- (토론 질문2) 당신의 국가에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에 자연 기반 요소를 어떻게 통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염 완화, 대기질 개선, 홍수 저감 등 어떠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또한 이러한 편익 또는 정책 미이행 비용은 정량적으로 평가된 바 있는가?
 - 각국은 제도적 규제와 정책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연 기반 요소를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환경적·사회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입증하고 있음
 - 영국: 2024년부터 ‘생물다양성 순증가(Biodiversity Net Gain, BNG)’ 제도를 의무화하여,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대비 최소 10% 이상의 생물다양성 증가를 입증해야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개발 초기 기획 단계부터 녹색 인프라 설계를 도시개발 과정에 내재화하고자 함
 - 헝가리: 「건축법」에 10개의 전략 원칙을 도입하여, 개발 면적의 최소 3% 이상을 녹지로 유지하고 개발지역 반경 500m 내 녹지대(greenbelt)를 확보하도록 규정함
 - 폴란드: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녹화 전략, 빗물 관리 및 빗물 저류 시스템 등을 포함한 도시 기후적응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핀란드: 도시를 녹색 네트워크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략적 기후행동계획과 연

- 계하여 녹색 지붕(green roofs) 등 자연 기반 요소 도입을 적극 장려함
- 프랑스: 2016년 제정된 관련 법률을 통해 도시계획 문서에 생물다양성 훼손 방지와 자연공간의 보존·복원 의무를 명시함
 - 몇가지 사례로 이미 이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와 정량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음
 - * 일본: 가로수 식재와 벽면 녹화를 통해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시공원이 주변 기온을 최대 2.5도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네덜란드: 녹지 공간과의 인접성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택 가격이 약 4-12%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 영국: 생물다양성 순증가(Biodiversity Net Gain, BNG) 제도 도입 이후, 개발사업자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오프사이트(off-site) 상쇄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서 약 5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짐
 - * 미국: 녹지 접근성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약 274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정량 평가됨
 - * 사무국: OECD 사무국은 기후변화와 오염 문제는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손실은 자연의 완충·정화·조절 기능을 약화시켜 도시 열섬현상, 홍수, 가뭄, 오염 등을 더욱 악화시킴.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보건적 피해가 확대됨. 특히 현재 남아 있는 맹그로브 숲이 모두 사라질 경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800만 명이 추가적인 홍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공유함
- (토론 질문3)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은 당신 국가의 도시정책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또한 최근 발생한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난 사례로부터 향후 도시의 대응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가?
 - 다수의 국가들은 자연기반해법을 도시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적극 반영·주류화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해 다른 정책적 접근을 제시함
 - 캐나다: ‘자연 인프라 기금(Natural Infrastructure Fund)’ 등을 통해 식수·폐수·우수 관리 인프라 구축 시 자연 기반 또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적용하는 사업에 적극 투자함
 - 네덜란드: 자연기반해법을 도시정책에 점차 통합하고 있으며,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물과 녹지를 위한 공공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녹색 청사진’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함. 또한 교통 등 다양한 정책 부문과 연계한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함
 - 모로코: 스펀지 도시(Sponge City) 개념과 자연기반해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도시 내 토양 투수성 규제와 지역 단위 회복탄력성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반면, 미국: 자연기반해법 중심 정책이 주택 공급을 제약하고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환경정책은 규제 확대보다 혁신과 시장 중심 접근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슬로베니아: 2023년 대홍수 이후 공간계획 체계를 전면 개선하였으며, 홍수 위험지역 내 정주 및 산업시설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물 순환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확인함
- 한국: 폭우·폭염 등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재난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위험 수준에 기반한 예방 조치를 도시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모로코: 과거 재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45개 토지이용 지도를 구축·배포하였으며, 도시개발 시 취약성과 위험도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함

(6) [Item 6] 실행 중심의 OECD 정책도구(Tools)가 실제 도시정책의 현장적용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16:00-17:00)

- WPURB 의장
 - 도시들이 재산업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정부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중심(action-oriented)의 정책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추세임
 - 이번 세션에서는 중간 규모 도시를 위한 정책 툴킷(policy toolkit), 도시 포용성 성장 로드맵, 타 도시 정책 아이디어 도입을 위한 툴킷(toolkit), 그리고 OECD 지역 데이터 포털(OECD Local Data Portal)과 같은 사용자 친화적 데이터 플랫폼 등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OECD 정책도구들을 활용하여 도시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함
- 정책적 비전과 현장 실행 사이의 '집행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논의되며, 이번 세션에서는 도시들이 직면한 다양한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수성과 여건에 맞추어 정책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실천적·현장 중심의 정책도구들을 소개하고자 함
- 중소도시: 중소도시(Intermediary Cities)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됨. 중소도시는 OECD 전체 인구의 약 20%, 전체 도시 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문화 등 5대 도시 유형별 발전 로드맵을 통해 대도시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 전략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시됨
- 포용적 성장 로드맵(Inclusive Growth Roadmap): 진단, 우선순위 설정, 설계 및 이해관계자 동원, 실행,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5단계 순환 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

- 도시 간 정책 아이디어 도입(Adopting Ideas): 단순한 정책 모방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춘 '적응'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됨. 또한 도시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실행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아이디어 자체의 부족이 아니라 실행 역량의 부족임이 강조됨
- 국가별 대표단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체류 권리(Right to Stay)' 전략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과 지역 매력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현재 거주 지역 내에서 교육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해당 전략은 EU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핀란드: 헬싱키 사례로 약 80년간 지속된 무상급식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교육·영양·사회적 포용이 통합적으로 결합된 '포용적 성장 로드맵(Inclusive Growth Roadmap)'의 대표 사례로 평가됨
- 도시정책 논의의 초점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됨
 - 이번 세션에서 소개된 정책도구들은 도시들이 직면한 행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우수사례를 각 지역의 맥락에 맞게 적용·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실행 기반으로 평가됨
 - 또한 실천적 정책도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업반은 향후 2027년까지 이어질 차기 사업계획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는 점이 공유됨
- (토론 질문1) 제안된 정책도구들은 귀국 도시들의 현재 정책 수요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유형의 도구나 형식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 회의 참석 국가 및 기관들은 제안된 정책도구들이 도시들이 실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함. 또한 각국의 정책 환경과 행정 역량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실천적 도구 필요성이 강조됨
 - 미국: 지방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주택 보유 비용 절감 및 보험 접근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툴킷(toolkit) 형태의 정책도구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모든 인구와 기능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규모 및 중간 도시(intermediary cities)를 위한 정책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정책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도시들도 각자의 지역 여건에 맞추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일본: 국가별 데이터베이스와 우수 정책 사례(good practices) 모음집이 매우 유용한 정책 자원이라고 평가함.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포괄적인 형식의 정책도구 필요성을 제안함
- 프랑스: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도구와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도시들이 전략 수립 자체보다 실제 실행 단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의 '실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 중심 도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구체적인 사례로 다층적 정부 간 라운드테이블, 코칭 프로그램,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특정 이슈 중심의 간략 정책 브리프 등을 제시함
- (토론 질문2) 이러한 정책도구 활용을 통해 어떠한 편익이 기대되는가? 반면 실제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장소 기반 정책(place-based policy) 추진 과정에서 타 도시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가능성을 높일 경우, 모든 정책을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함
 - 일본: 정책도구가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도시들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수립한 뒤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함
 - 프랑스: 정책 톨킷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언급함
 - 블룸버그 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 타 도시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부의 시간·기술·조직 구조 등 행정 역량(capacity)의 한계가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함. 또한 자금 조달의 제약, 규제 장벽, 부서 간 조정의 어려움, 리더십 부재 등이 정책 실행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제시됨
- (토론 질문3) 당신의 국가에서는 정책도구 확산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 또는 후속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프랑스: 정책도구가 실제 현장 상황과 다양한 공공정책 맥락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OECD 사무국: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협력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함
- * 첫째, 정책 톨킷이 기존 OECD 내부 채널을 넘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국 현지 언어로의 번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특히 이는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됨

- * 둘째, 개별 국가 및 지방정부가 직면한 우선과제와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사무국과 회원국 간 1대1 맞춤형 웨비나 및 코칭 체계 구축이 제안됨. 이를 통해 비공개 논의를 기반으로 국가별 상황에 특화된 데이터와 정책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성이 강조됨
- * 셋째, 국가별 포용적 성장 리뷰, 균형발전 및 다핵화 리뷰 등 기존 OECD 정책 평가협의 체계와 정책 툴킷 및 자가진단 도구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됨. 이를 통해 정책 논의를 보다 실행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회원국 내 정책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강조됨

(7) [Item 7] 국가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17:00-1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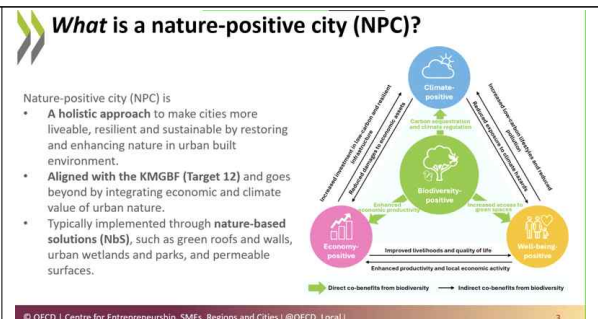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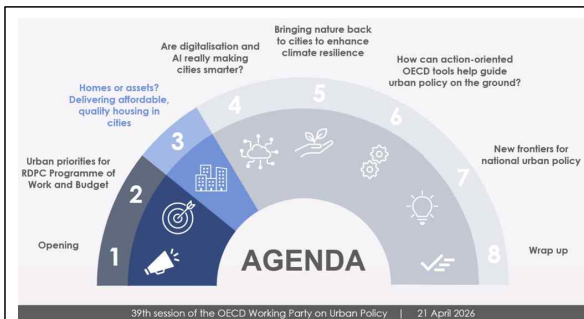
- WPURB 의장
 - 이번 세션은 국가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세 가지 신규 OECD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프로젝트1) 중간 규모 도시의 경쟁력 강화
 - 최근 OECD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동연구인 「지역발전을 위한 중간 규모 도시의 잠재력 활성화(Unlocking the potential of intermediary c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에서는 중간 규모 도시가 균형적 국토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됨
 - 특히 중간 규모 도시는 공공서비스 제공 거점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며, 대도시와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신규 프로젝트는 국가정부가 서비스 공급, 물리적·디지털 연결성 등 중간 규모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맞춤형 정책 접근을 설계·최적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각 중간 규모 도시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소 기반 전략 수립과 함께, 해당 전략의 설계 및 실행 지원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주요 과제로 논의됨
 - 아울러 국가 및 도시별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실질적 정책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기존 정책 툴킷의 실효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젝트2) 도시광산과 순환형 건축환경: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 도시는 건축물, 기반시설, 제품 및 폐기물 흐름 속에 대규모 회수 가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경제활동 창출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핵심 광물 수요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도시 내 기존 자원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논의됨

-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WPURB의 순환경제 및 건축물 탈탄소화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와 도시 차원의 입법·계획·규제 수단이 도시광산 활성화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도시 내 최대 물질 저장소 중 하나인 건설·건축 부문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건축 기준, 도시계획 요건, 철거 허가제, 자재 여권, 공공조달 규정, 폐기물 규제, 탄소 성능 기준 등이 리모델링, 해체, 전자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자원 회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임
- 또한 이러한 정책수단이 건축물 수명 연장 및 자재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해 탈탄소 전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할 계획임
- (프로젝트3) 지역 기업을 통한 도시 AI 혁신 촉진
 - 도시들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AI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SMEs)과 스타트업이 도시문제 해결형 AI 솔루션을 개발·확산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됨
 - 이번 신규 프로젝트는 기존 WPURB 연구인 「AI for Advancing Smart Cities」를 기반으로, 국가정부가 도시 AI 혁신 생태계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보다 개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의 현장 지식을 정책에 반영하고, 도시 단위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또한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수요 예측,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시민 참여 확대 등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

(8) [Item 8] 회의 종합 및 마무리 (17:45-18:00)

- 본 회의에서 도출된 의제들은 OECD의 차기 사업 및 예산 계획(PWB 2027-2030) 내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예정임
- 주요 일정 로드맵
 - 2026년 4월 23일: 제8차 OECD 도시·지역 순환경제 라운드테이블(콜롬비아 이바게)
 - 2026년 5월 17-22일: 제13차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13)(아제르바이잔 바쿠)
 - 2026년 6월 9일: 중간 규모 도시 및 도시 포용성 성장 프로젝트 출범(벨기에 브뤼셀)
 - 2026년 6월 11일: 도시 간 정책 아이디어 도입 톨킷 출범(독일 베를린)
 - 2026년 9월 8일: 제9차 OECD SDGs 이행을 위한 도시·지역 라운드테이블(독일 베를린)
 - 2026년 12월 2일(TBC): 제6차 OECD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프랑스 파리)

- 2026년 12월 3-4일 (TBC) : 제5차 OECD 지속가능 건축물 라운드테이블 (프랑스 파리)
- 2026년 12월 7-11일: RDPC 주간 중 개최되는 제40차 WPURB 회의 (프랑스 파리)
-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가 단순한 기술 집약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특히 주택을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 접근하고, 기술 역시 목적 자체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성이 공유됨
- 또한 도시의 '스마트성 (smartness)'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영·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과 포용적 정책 비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주요 메시지로 제시됨
- 아울러 OECD는 향후 정책 툴킷, 데이터 플랫폼,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보다 실행력 있는 도시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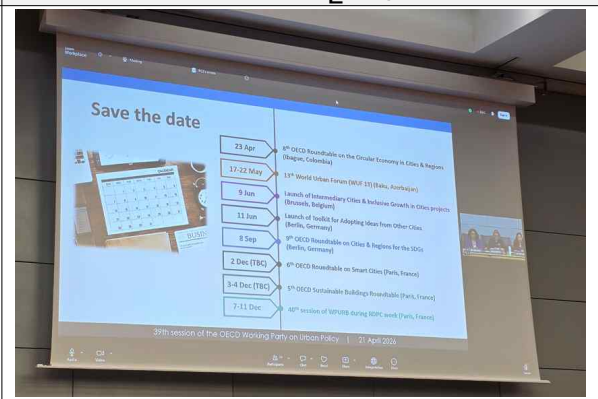


▲ WPURB 의제

▲ Item 5 발표자료

Statements	Four score
1.1: The city has a clear vision for innovation specialization in its key sectors.	1 2 3 4 NA
1.2: The city has a clear vision for innovation specialization in its key sectors.	1 2 3 4 NA
1.3: The city has a clear vision for innovation specialization in its key sectors.	1 2 3 4 NA
1.4: The city has a clear vision for innovation specialization in its key sectors.	1 2 3 4 NA
1.5: The city has a clear vision for innovation specialization in its key sectors.	1 2 3 4 NA

Priority	Address targeted	Timeline	Responsibility	Budget	Status
Improve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essential local healthcare	Big spring healthcare services within the ERM	May 2025 - June 2026	Director of XX	EUR 000	Completed
Expand emergency needs survey	Collect and analyze local health data	XXX,200 - XXX,200	Director of XX	EUR 000	In progress
Expand physical and digital accessibility	Expand emergency needs survey	XXX,200 - XXX,200	Director of XX	EUR 000	Not started yet
Identify, characterize and monitor gaps	Expand physical and digital accessibility	XXX,200 - XXX,200	Director of XX	EUR 000	Not started yet



▲ Item 6 발표자료

▲ Item 8 주요 일정 로드맵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1일차)

1. 회의명

-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Day 1)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2일 (수), 9:30 ~ 18:00
- OECD Room CC10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주열 국장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권유정 과장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박상우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문성윤 자문관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과 김종성 과장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박정규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정예은 주무관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신서경 부연구위원
- OECD 사무국 이랑 과장
- 주OECD대표부 김남균 참사관

4. 주요 주제

- 개회 및 논의 배경 설정
- RDPC 운영 권한(Mandate) 개정 및 갱신
- RDPC 2027-2030 업무계획 및 예산(PWB) 초안
- 지역발전, 안보 및 국방
- OECD 지역발전: 전환 관리, 지역 격차 및 정책적 상충관계 대응
- 정부 수준 간 인프라 투자: Compass 및 OECD-유럽지역위원회 (CoR) 공동조사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1] 개회 및 논의 배경 설정 (09:30-10:00)

- WPURB 의장
 - 의장인 Peter Berkowitz가 제55차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를 개최함. 안건(CFE/RDPC/A(2026)3/REV1)을 소개하고 대표단의 승인을 요청함
 - 이후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국장인 Lamia Kamal-Chaoui가 최근 주요 활동 현황과 함께, RDPC가 CFE 및 OECD 전체 업무에 기여한 내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함
 - * 기초발언을 통해 「중기 경제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인용하며 세계경제의 회복탄력성 현황을 설명함
 - * 2026년 세계 GDP 성장률은 2.9%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압력 완화에 따라 2026년 4.0%에서 2027년 0.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을 공유함
 - * 또한 이러한 거시경제적 충격이 지역별 산업구조와 에너지 의존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지역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함
 -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OECD 가입 후보국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파트너국들이 참석하여 지역정책 논의의 국제적 중요성이 재확인됨
 - 회의는 비공개 원칙 하에 진행되었으며, 다자간 정책 조율을 위한 행정 공지와 온라인 참석자를 위한 기술적 운영 지침이 승인됨
 - 이번 회의는 2027-203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PWB)의 전략적 방향 설정을 주요 목표로 진행됨
 - 특히 '실질 제로 성장(Zero Real Growth)'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제약 상황 속에서,

위원회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됨.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RDPC 위임사항(Mandate) 갱신 과정의 주요 전략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됨

● 회의 결과 요약*

* RDPC 1일차 회의 주제별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함

– 첫째, 글로벌 불확실성

* 현재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긴장, 무역 갈등, 기후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재정적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공유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타겟형 지역정책과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됨

– 둘째, RDPC Mandate

* 2026년 6월 30일 만료 예정인 RDPC 및 산하 작업반의 5년 단위 권한(Mandate) 갱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OECD 이사회(Council) 제출을 위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짐

– 셋째, 2027-2030년 RDPC 작업 및 예산 프로그램(PWB) 초안

* 2027-2030년 적용 예정인 작업 및 예산 프로그램(PWB) 초안에 대한 회원국 대표단 논의가 진행됨

* 신규 프로그램은 ▲경쟁력 강화 ▲메가트렌드 대응 ▲거버넌스 및 재정 시스템 ▲데이터 및 지표 ▲아웃리치 및 글로벌 영향력 등 5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됨

* 참석국들은 해당 초안이 인구구조 변화, 기후 회복력, AI 및 디지털화, 주택, 인프라 등 주요 지역정책 과제를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와 장기적 정책 효과 분석 강화 필요성이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됨

– 넷째, 지역 개발, 안보 및 국방

* 지정학적 긴장 심화와 국방비 증가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국방 지출 증가는 방위산업 및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국경 지역 긴장 고조는 경제적 고립과 접경지역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서비스 예산을 압박할 위험요인으로도 제시됨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군 양용 투자 확대와 함께,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총력 방위’ 및 포괄적 안보 접근을 통한 지역 인프라와 회복력 강화 방안이 논의됨

– 다섯째, OECD 내 지역 개발: 전환, 격차 및 정책 상충관계(Trade-offs) 관리

* 2019년 이후 OECD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경쟁력, 산업 전환, 주택, 녹색 전환 등 주

요 정책 분야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상충관계(trade-off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 주요 상충관계로는 ▲혁신 기회가 역량을 갖춘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확대 되는 문제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 비용 증가 ▲급속한 탈탄소화가 탄소 집약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 ▲단기적 주택 규제 완화가 장기적 구조개혁을 지연시킬 가능성 등이 제시됨
- * 회원국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거점 집중 투자 간의 정책적 딜레마 극복 사례와 전환기 금 운영 등 자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함
 - 여섯째, 정부 계층 간 인프라 투자: 나침반(Compass) 및 OECD-CoR 설문조사
- *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OECD 원칙과 다층적 거버넌스 지표인 '나침반' 도구 개발 현황이 소개됨
- * OECD 평균 기준 공공투자의 약 55%가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공유 되었으며, 단순한 자원 조달을 넘어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중앙-지방 간 수직적·수평적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됨
- *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지방정부가 투자 추진 과정에서 보조금 확보 및 자체 자원 조달 등 재정 문제를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효과적인 정책 조정 부족 역시 주요 제약 요인으로 제시됨

(2) [Item 2] RDPC 운영 권한(Mandate) 개정 및 갱신 (10:00-11:00)

- WPURB 의장
 -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및 산하 작업반의 권한(Mandate)은 OECD 이사회(Council) 결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음
 - OECD 이사회는 RDPC에 2026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권한 갱신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5년 단위 권한 개정 및 갱신 논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됨
 - 첫 번째 논의는 2025년 12월 3일 RDPC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정안은 2026년 2월 4일과 2026년 3월 20일 두 차례의 온라인 임시회의(ad hoc meeting)를 통해 추가 검토됨
 -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권한의 개정안(CFE/RDPC (2025) 29/REV3)에 대한 대표단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이를 OECD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한 최종 조율이 진행하고자 함
- 위원회의 향후 5년을 규정할 위임사항 개정 논의에서는 용어 선택에 내포된 추가적인 정책적 함의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정교한 논리 대결이 전개됨

- 특히, ‘증거 기반(evidence-based)’과 ‘데이터 주도(data-driven)’ 표현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됨
 - 미국: 용어의 중립성과 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주도(data-driven)’ 표현 사용을 제안함
 -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반면 이 국가들은 데이터 자체보다 이를 검증(vetting)·해석하는 OECD의 분석 역량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기반(evidence-based)’ 접근 유지 필요성을 주장함
 - 이에 대해 의장은 데이터 활용과 분석 역량 강화를 함께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함
- 성평등 및 불평등 관련 문구에 대해서도 논쟁이 발생함
 - 호주, 콜롬비아, 멕시코: ‘성별 불평등(gender inequality)’ 표현의 명시적 포함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가시성 확보를 주장함
 - 영국: 영국 또한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지지함
 - 미국: 반면 미국은 보다 포괄적 표현 사용을 통해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논쟁은 다음과 같음
 -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transition to low-carbon economy)’ 문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함
 - 미국: 에너지 안보 관점을 고려하여 ‘모든 에너지원 활용(all-energy-sources approach)’ 개념을 제안하며 특정 에너지원 중심 접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장시간 논의 끝에 장소 기반 정책(place-based policies) 등 일부 핵심 문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짐
- 반면, 성평등 및 기후변화 관련 일부 미합의 문구(bracketed text)에 대해서는 OECD 이사회(Council) 차원의 수평적 해결(horizontal solution)에 맡기기로 결정함
- 한편, 산하 작업반(Working Parties)의 위임사항(Mandate)은 전반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승인됨

(3) [Item 3] RDPC 2027-2030 업무계획 및 예산(PWB) 초안 (11:30-12:45)

- WPURB 의장
 - 사무국은 RDPC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무총장의 「2027-2030 업무계획 및 예산(PWB) 수립을 위한 위원회 지침(Guidance to Committees)」을 바탕으로 OECD 차원의 주요

우선과제를 설명하고, RDPC PWB 초안이 해당 지침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소개함

- 또한 RDPC 커뮤니티에는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의장인 Stephen Jones 대사가 제작한 영상 자료(vodcast)에서 PWB 개혁(PWB Reform)의 배경과 주요 내용, PWB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위원회(Substantive Committees)가 수행하는 역할 등을 소개함
- 이번 PWB 초안은 2025년 12월 RDPC 회의에서 논의된 예비 문서 [CFE/RDPC (2025) 32]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회의 이후 27개 대표단이 제출한 서면 의견 또한 함께 반영될 예정임
- 수정된 PWB 초안[CFE/RDPC (2025) 32/REV1]은 제55차 회의 이후 대표단에 배포될 예정이며, 승인 절차를 거쳐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에 제출될 계획임
- 위원회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2027-30 PWB는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주기를 확대하고, 5대 핵심 축(Pillar)을 중심으로 구조화됨
 - 2027~2030년 PWB는 ▲지역 경쟁력 및 생산성 ▲메가트렌드(인구·기후·디지털) 대응 ▲거버넌스 및 자원 조달 ▲데이터 및 지표 ▲대의 협력 및 글로벌 영향력 등 5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강화를 위해 지역 데이터 포털(Local Data Portal), 지방정부 재정 세계 관측소(World Observatory on Subnational Government Finance), 지능형 공간정보 랩(Geospatial Lab) 등 주요 데이터·분석 플랫폼을 사업계획에 포함함
- 국가별 대표단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를 핵심 우선과제로 강조하였으며, 관련 국가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할 의향을 밝힘
 - 영국: AI 전환이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요소의 명시적 반영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교통 인프라가 노동시장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의 '실질적 규모(effective city size)'를 확장시키는 경제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이탈리아와 프랑스: 지역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fairness)' 관점을 정책 평가 지표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함
 - 유럽연합(European Union): 산업정책의 재강화 흐름 속에서 '체류 권리(Right to Stay)' 전략을 기반으로 한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무국은 이번 PWB 수립 과정에서 수천 건의 보고서를 분류·분석하기 위해 AI 기

반 분석 도구(AI-powered tools)를 활용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토론 질문1) 업무계획 및 예산(PWB) 초안에서 제시된 주요 방향성에 동의하는가? 추가적으로 보완되거나 포함되어야 할 분야가 있는가?
 - 프랑스: PWB 초안의 전반적 방향성에 동의하며,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다만 디지털 기술 및 AI 활용, 기후 회복력 강화와 관련하여 기술 발전이 농업 및 농촌 연결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OECD Committee on Agriculture와의 협력을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콜롬비아: 경쟁력, 회복력, 장소 기반 접근, 다층적 거버넌스 등 초안의 균형 잡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전반적으로 지지함. 또한, 성인지(gender) 관점과 취약 지역(vulnerable territories)의 특수 수요 등 교차적(cross-cutting) 요소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함
 - 한국: 장소 기반 회복력(place-based resilience)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초안의 강한 강조를 전적으로 지지함
 - 영국: 디지털·AI 전환과 기후 완화 등 메가트렌드 중심의 방향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추가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과 함께, 노동시장 확대와 도시의 실질적 규모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 및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함
 - 포르투갈: 5대 성과 체계(output results)의 구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Regional Outlook」 등 핵심 간행물의 가시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해 이를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을 제안함
 - 폴란드: 경쟁력, 불평등, 회복력, 거버넌스 등 초안의 방향성이 자국 우선과제 및 글로벌 위기 상황과 잘 부합한다고 평가함
 - 이탈리아: 지역 격차와 인구·기후·디지털 전환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성에 동의함. 다만 지역정책의 장기적 영향(long-term perspective)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발적 기여금 중심 재원 구조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 강화를 제안함
 - 일본: 환경 문제, 디지털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다루는 방향성에 동의함
 - 슬로베니아: 초안 방향성을 환영하며, 포르투갈과 동일하게 핵심 간행물의 가시성 강화 필요성에 동의함
 - 네덜란드: 초안을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프로그램으로 평가함. 이탈리아가 제안한 장기적·세대 간 관점을 지지하는 한편, 주택·기후변화 등 정책 주제 간 상호 연관성(interlinkages)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함

- 유럽연합(EU): 경쟁력 강화 중심의 작업 프로그램 방향성에 동의함. 다만 국방(defense) 산업을 단순 안보 차원이 아닌 지역 산업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AI 기반 국방산업이 선도 도시 중심으로 집중될 경우 지역 격차 심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미국: PWB 초안을 회원국 우선순위가 잘 반영된 출발점으로 평가함. 특히 혁신과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역할과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독일: 주요 방향성에 동의하며, 특히 데이터 및 영토 지표의 수집·배포 기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
 - 캐나다: 다양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적응력 강화 방향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함
- (토론 질문2)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 프랑스: 당면한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국토 정책에 대한 실질적 테스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함
 - 콜롬비아: 지역 격차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개발 및 투자 재정(financ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investment)’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 한국: 우선 추진 과제로는 ▲저출산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명시적 대응 ▲공간 재편과 관련한 국가 간 정책 경험 공유 필요성을 제시함. 또한 도시 침수와 열섬현상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기후 회복력(resilience)을 영토 및 도시개발 전략의 핵심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영국: 성장과 투자 확대를 위한 장소 기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증거 기반(구축과 지방정부 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포르투갈: 최우선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강조함
 - 폴란드: 특히 거버넌스 및 실행 시스템(implementation system)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하에서 정책수단 효과 평가와 재정 조정 및 역량 구축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탈리아: 미래 세대가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교육·일자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fairness)’을 핵심 정책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일본: 탈탄소화 등 구체적 정책 실행 과정에서 OECD 가이드라인과 국가 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coordination)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함

- 슬로베니아: ‘지역 내 (within)’보다 ‘지역 간(across)’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뿐 아니라 농촌까지 포함하는 세분화된 공간 데이터 (granularity)의 중요성을 언급함
- 네덜란드: AI를 생산성 혁신에 활용하고, European Union 등 타 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함
- 유럽연합(EU): ▲전 지역 경쟁력 강화 ▲지방정부 역량(capacity building) 강화 ▲중소도시 단위 서비스 보장을 통한 ‘머무를 권리(right to stay)’ 확대 ▲세분화된 데이터 (granular data)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함
- 미국: AI 및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노동자들이 기술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모델(workforce training models)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 독일: 인구구조 변화와 녹색·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교 가능한 국제 데이터와 지역발전 관련 실증 연구(empirical studies)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캐나다: 기업들(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지원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국방 및 안보 분야 우선순위 반영 필요성에도 공감함

(4) [Item 4] 지역발전, 안보 및 국방 (14:30-15:35)

- WPURB 의장
 - 이번 세션에서는 국방 및 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산업 구조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기회와 도전 과제를 함께 검토하고자 함
 - 지정학적 긴장 심화와 분쟁 증가로 인해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은 국방 및 안보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국방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국방 지출 증가는 방위산업 생산, 물류, 국방 관련 혁신 활동이 집적된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교육·보건의료·기반시설 등 지역발전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됨
 - 또한 다수 국가에서는 적대적 이웃 국가와 인접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비태세, 민방위, 인프라 회복력 강화 및 지역 매력도 제고 등을 추진하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CFE/RDPC(2026) 3]
-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안보(Security)’와 ‘지역 개발(Regional Development)’의 전략적 연계가 이번 회의의 핵심 신규 의제로 부상함

- 안보-지역 개발 연계 모델 논의: 전문가 Oyin Oladosu-Carson은 Singapore의 ‘총력 국방(Total Defense)’과 Japan의 ‘종합 국가 안보(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사례를 소개하며, 북유럽 중심의 사회적 안보(Societal Security) 개념을 넘어서는 포괄적 방위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함. 특히 국방 지출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지역 사회의 신뢰와 사회적 응집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지역별 정책 사례 및 전략에 대한 국가별 대표단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핀란드: 동부 접경지역 폐쇄에 대응하여 지역 활력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경제구역(SEZ) 시범 도입 검토 현황을 공유함
 - 루마니아: 국방 인프라의 민군 겸용(dual-use) 활용을 통해 영토 응집성(territorial cohesion)을 강화하는 정책 논리를 제시함
 - 영국, 튀르키예: 조선업 및 무인기(UAV) 산업 등 국방 산업 생태계를 고속권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SME)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발표함
 -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 속에서도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며 높은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과 관심이 이어짐
 - OECD 위원회: 향후 국방 투자가 지역의 ‘지리적 불만(geography of discontent)’을 완화하고 지역 회복력과 통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 (토론 질문1) 변화하는 국방 지출 및 안보 우선순위가 당신의 국가의 지역발전 동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토론 질문2) 국방 관련 활동이 지역별로 미치는 공간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은 무엇이며, 이러한 영향은 방위산업 및 군사기지 입지 지역, 접경지역, 산업구조가 다변화된 지역 등 지역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핀란드: 동부 국경 지역의 안보 위협 심화와 국경 폐쇄로 인해 지역 활력 유지 및 개발 재원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안보와 지역개발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 핀란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경제구역(SEZ) 시범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콜롬비아: 안보를 단순한 군사 목표가 아니라 ‘영토 개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방 예산 확대가 연결성 강화, 국가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역량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외곽 및 국경 지역에서는 군·경 배치가 경제 활동과 국가 서비스 제공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산업 다변화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국방 투자가 지역경제의 ‘닻(anchor)’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도시 및 산업 중심지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 생태계와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함

- 에스토니아: 국방 지출 확대가 동부 국경 지역에 가장 큰 공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정부는 국경 지역에 대한 국방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장기적 경제 경쟁력 확보 및 공공 공간·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힘
 -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존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국경 지역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안보와 국방(회복력)을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국경 지역 인프라 강화,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경제적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힘
 - 영국: 국방 투자 결정이 특정 지역의 성장과 쇠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 과거 조선소·잠수함 산업 등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면서, 투자 감소 시 심각한 실업과 빈곤이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 문제가 나타났다고 언급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에도 활용 가능한 국방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노르웨이: 북극(High North) 지역의 안보 긴장 고조에 따라 군사 활동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택·인프라·지자체 서비스에 대한 압박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반면 지역 기업에는 국방 유지보수 및 관련 제품 생산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평가함. 정부는 ‘총력 방위(total defense)’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당국과 범부처 협력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힘
 - 캐나다: 방위 산업과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동시에 국가 안보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7개 지역 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국방 투자 이니셔티브(Regional Defence Investment Initiative)’를 운영 중이라고 밝힘
 -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등 기존 제조업체들이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튀르키예: 방위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특히 수도 앙카라를 중심으로 첨단 방산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방위 산업 기술이 의료·섬유·소프트웨어 등 민간 산업으로 확산되는 민군 양용(dual-use)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토론 질문3) 안보와 국방을 함께 고려할 때, 당신의 국가 내 지역들이 직면한 주요 기회와 도전 과제는 무엇이며, OECD의 분석 및 정책 가이드가 특히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
 - 핀란드: 국방 투자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 지적하며, 일자리와 필수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정신적 회복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중소기업(SME)이 대규모 국방 조달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의 기업과 고등교육기관이 연계된 혁신·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주요 기회로 제시함
- 콜롬비아: 여전히 불법 경제, 지속적인 안보 위협, 지역 불평등 해소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함. OECD에 대해서는 ▲영토개발 관점에서의 국방·안보 지출 평가 방법론 ▲다층적 거버넌스 모범사례 ▲민군 양용(dual-use) 혁신 전략 ▲투명성 및 영향 평가 관련 비교연구 제공 필요성을 제안함
 - 에스토니아: 군수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군수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함. OECD에는 EU 외부 국경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인구 유치 전략에 대한 분석 지원을 요청함
 - 폴란드: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 안보 과급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이를 분석할 회복력 관련 데이터·지표 부족을 주요 과제로 지적함. OECD 차원의 지속적 분석 프레임워크와 정책 가이드 제공 필요성을 강조함
 - 영국: 국방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spillover)를 측정·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기술(skills), 주택, 인프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OECD의 정책 가이드를 요청함
 - 노르웨이: OECD가 국방 관련 정책의 지역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체계화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해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캐나다: 북극 지역의 안보와 주권 강화를 위한 민군 양용(dual-use) 인프라 투자를 핵심 기회로 제시함
 - 이탈리아: 산업 전환 과정에서 재교육(reskilling), 혁신 지원, 지역 생산 시스템 적응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지역들이 EU 및 국가 재원을 국방·안보 분야로 얼마나 재배분하고 있는지와 그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유럽연합(EU): 국방 지출 확대가 전통 산업 쇠퇴를 보완하고, 전환기 산업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 이를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 자원 조달 체계, 국경 간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한 OECD 차원의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함
 - 루마니아: 민간과 국방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민군 양용(dual-use) 인프라 구축을 핵심 우선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특히 영토 결속력(cohesion) 부족이 일자리 문제와 지역 불만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취약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와 지역발전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함

(5) [Item 5] OECD 지역발전: 전환 관리, 지역 격차 및 정책적 상충관계 대응
(15:35-16:30)

- WPURB 의장
 - 이번 세션에서는 OECD 전반에서 수행된 최근 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대규모 재고조사(stocktaking)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해당 자료는 회의 이전에 대표단과 공유되었으며, 경쟁력, 산업 전환, 주택 및 인프라 제약, 녹색 전환의 공간적 영향 등 공통적인 도전 과제와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함
 - 또한 OECD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CFE/RDPC (2026) 4]
 - 분석 자료는 정부가 점차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상충관계 (trade-offs) 역시 함께 조명함
 - 주요 사례로는 ▲혁신을 선도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과 기회를 보다 폭넓게 확산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면서도 전환 비용에 취약한 지역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 ▲주택 공급 확대와 환경·공간계획 규제 간 긴장 관계 등이 제시됨
 - 이번 발표와 RDPC 논의 결과는 향후 6월 최종 확정 예정인 간략 정책 문서 작성 과정에도 반영될 예정임
- 2019년 이후 OECD가 수행한 지역개발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 (stocktaking) 한 결과,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한 주요 전략적 상충관계 (policy trade-offs) 가 도출됨
- 사무국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산업 전환, 서비스 접근성, 녹색 전환, 주거, 국방 등 6대 핵심 테마에 걸친 수천 건의 보고서를 분류·분석함
 - 분석 결과, 지역 격차 해소와 국가적 성장 목표 간 충돌 지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정책 상충관계로는 ▲혁신 역량을 선도 지역에 집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또는 기회를 모든 지역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할 것인지의 문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탄소화 가속과 탄소 집약 지역 지원 비용 간의 균형 ▲주택 공급 확대와 환경 보호 및 효율적 공간계획 간의 긴장 관계 등이 제시됨
 - 슬로베니아 등 회원국들은 이러한 정책 상충관계를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의 세분화 (granularity)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지역 간 (across regions)’ 격차뿐 아니라 ‘지역 내 (within regions)’ 격차까지 분석할 수 있는 정밀한 지표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제기됨
- (토론 질문1) 발표 자료에서 제시된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가 현재 당신의 국가가 직면한 주요 지역 과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또는 추가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할 과제가 있는가?

- 한국: 수도권으로의 자본·혁신 집중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산업 구조조정,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핵심 지역 과제로 제시함
- 영국: 런던과 북부 지역 간의 심각한 지역 격차와 이에 따른 자본 흐름의 불균형을 주요 정책 상충관계로 제시함.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투자 유치가 어려우며, 낮은 지가와 높은 부지 정화 비용이 다시 투자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지적함
- 일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추진 과정에서 환경 성능 강화와 안전성·경제성 확보 사이의 상충관계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특히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내진 설계 강화를 위해 탄소 배출이 높은 콘크리트와 철강 사용이 불가피한 구조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설명함
- 코스타리카: 국가 차원의 경제 효율성과 영토적 형평성 간의 긴장 관계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함
- 네덜란드: 혁신과 성장이 서부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구산업 지역은 쇠퇴하고 있으며, 동시에 약 40만 호 규모의 주택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거주성 악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함
- 콜롬비아: 수도권(보고타)과 소외 지역(초코 등) 간의 극심한 경제·생산성 격차와 경제 다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함.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한 세율 인하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 사이에서 소규모 지방정부가 겪는 재정적 상충관계를 강조
- 유럽연합(EU): 복합적 전환을 다룰 때 '시민 참여(citizen engagement)' 요소가 반드시 추가로 강조되어야 함
-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Sofia)로 성장과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인구 감소와 제한된 경제 기회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 격차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특히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공감되는 정책적 상충관계(policy trade-off)라고 설명함
- 루마니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영토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나머지 3개 지역 간의 개발격차 확대가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됨
- (토론 질문2) 제시된 정책적 상충관계(예: 경쟁력, 녹색 전환, 안보 관련) 중 당신의 국가에서 가장 크게 공감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또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긴장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가?
 - 한국: ①특히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적 딜레마를 관리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를 중

심으로 한 공간 재편 전략 등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②또한 탄소 중립 정책이 강원도 등 기존 석탄발전 의존 지역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충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직업 전환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영국: 용자-투자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성장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환수 가능한 인내 자본(patient recyclable capital)’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위험 분담(risk sharing), 지방정부의 투자 흡수 역량 강화, 지역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내진 설계 강화를 위해 탄소 배출이 높은 콘크리트와 철강 사용이 불가피한 구조적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법(Building Energy Efficiency Act)」 개정을 통해 에너지·자원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안전, 주택 감당 가능성(affordability)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2020-2050 포용적 및 탈탄소 경제를 위한 영토 생산 전략」을 수립하여 인구·디지털·녹색 전환을 반영한 생산 활동 고도화 및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개발법 제정을 통해 지역 기반(place-based)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네덜란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서부 외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활력 있는 지역(vital regions)’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공급, 단열 및 녹지화 등 기후 적응, 교육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콜롬비아: 낙후지역의 생산성 다변화를 위해 ‘국가 산업화 정책(National Industrialisation Policy)’과 ‘지역 수렴 전략(Regional Convergence Strategy)’을 추진함. 특히 소외 지역에 기술·혁신·기계 지원센터(ZASCAS)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특별 프로젝트 기금을 운영 중임.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교부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함
- 불가리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타겟형 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통합적 영토 투자(integrated territorial investment)’ 전략을 통해 부문별 정책과 지역 수요를 연계·조정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산업·인구·녹색 전환 등 복합적 전환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 부여(empowerment)가 핵심이라고 강조함
- 크로아티아: 각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와 특성을 기반으로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표적화된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완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함
-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 및 갈등 관리 문제가 핵심 정책 과제로 제기됨. 또한 영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협회 등 다양한 주체를 공공

부문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아울러 국가 차원의 권한 이양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최적의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주요 관리 과제로 논의됨

- (토론 질문3) 산업 구조조정, 인구구조 변화, 안보 위협 확대 등 복합적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정책이 이러한 다중 전환을 관리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
 - 유럽연합(EU): 혁신 집중에 따른 지역 격차와 ‘혁신의 역설(paradox of innovation)’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을 미학(aesthetic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과 결합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소규모 영토와 농촌 지역의 공간·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 사례로 ‘새로운 유럽 바우하우스(New European Bauhaus)’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보다 공정한 지역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루마니아: OECD와 협력하여 관련 적응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특히 중소도시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실무그룹(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복합적 전환 과제에 대응하고 있음
 - 그리스: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 주요 경제 기반인 관광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제기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관광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다변화를 유도하는 개별적·맞춤형 지역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6) [Item 6] 정부 수준 간 인프라 투자: Compass 및 OECD-유럽지역위원회(CoR) 공동조사 (17:00-18:00)

- WPURB 의장
 - 사무국은 OECD의 「인프라 관련 업무의 통합 및 연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접근방식(High-Level Approach, HLA)」,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인프라를 위한 고위급 원칙(High-Level Principles, HLPs)」 이행 현황을 설명 [COM/DAF/GOV(2025)1/REV1]
 - 해당 원칙안은 2025년 10월과 202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향후 회원국 간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OECD 이사회 권고안(OECD Council Recommendation) 형태로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 HLPs는 두 번째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수정될 예정이며, 이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절차도 진행될 계획임
 - * 이후 OECD Investment Committee, Public Governance Committe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등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 이번 세션에서는 정부 계층 간 공공투자의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를 진단하기 위한 ‘Indicator Compass’ 도구의 최신 개정 내용도 함께 소개됨 [CFE/RDPC(2026)7]
- * 해당 도구는 「정부 계층 간 효과적 공공투자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의 12대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 및 지역의 강점과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아울러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와 공동으로 수행한 지방정부 공공투자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됨 [CFE/RDPC(2026)5]
- * 해당 조사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공투자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 역량 제약, 자원 조달 여건 등에 대한 실증자료를 수집·분석한 것임
- 회의 마지막 세션으로서 정책 비전과 현장 집행 사이의 ‘집행 간극(execution gap)’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도구와 실행 체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됨
- 핵심 정책도구: 공공투자 지표 컴퍼스(Indicator Compass)
 - ‘Indicator Compass’는 「정부 계층 간 효과적 공공투자에 관한 권고」의 12대 원칙을 기반으로 개발된 진단 도구로, 국가별 공공투자 거버넌스의 강점과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됨
 - 포르투갈, 이탈리아: 전략적 조정, 민간 투자 동원 등 일부 항목에서 OECD 평균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인 사례를 공유함
 - 일본: ‘원칙 2(조정)’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 대해, 일본 특유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와 재정 개혁 과정을 설명하며 지표 해석 시 국가별 제도적 맥락 고려 필요성을 제기함
- 주택과 인프라의 기술적 정의 및 정책 톨킷
 - Nicolas Pino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프라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원칙을 설명하며, 주택이 전통적인 공공 인프라 정의에서 제외되는 기술적 배경을 소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United States 등 회원국들은 주택 정책이 지역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의제라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실천적(action-oriented) 정책 톨킷 개발 필요성을 제안함
- 현장 적용 사례 및 향후 추진 방향
 - 핀란드: 헬싱키의 무상급식 사례는 포용적 성장 로드맵이 실제 정책으로 구조화·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됨
 -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지방정부 공무원의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램 확대와 데이터 시각화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토론 질문1) 당신의 국가에서 정부 계층 간 공공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병목 요인은 무엇이며, 이는 당신 국가의 Indicator Compass 결과와 어떻게 연계되는가?
 - 캐나다: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과 민간 자본 활용의 제약이 공공투자 추진 과정의 주요 병목 요인으로 지적됨.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정부 간 조정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함. 또한 'Indicator Compass' 지표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와 인허가·규제 일정 문제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으나, 연방국가 특유의 수직적 재정 구조(vertical fiscal structure)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함
 - 콜롬비아: 소규모 지방정부 간 시스템 활용 역량 격차,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문제, 계획·예산·투자 프로세스 간 연계 부족, 새로운 디지털 방식 도입에 대한 제도적 저항 등이 주요 병목 요인으로 지적됨. 반면 'Indicator Compass' 지표에서는 장기 계획, 이해관계자 참여, 재정 관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공공투자 시스템 강화 노력의 결과임
 - 일본: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부족과 재정적 제약이 공공투자 추진 과정의 핵심 구조적 병목 요인으로 제시됨. 일본은 'Indicator Compass' 전반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 계층 간 조정(Principle 2)'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설문 과정에서 사용된 '계약(contracts)' 등의 개념이 자국의 행정 시스템 및 제도 구조와 충분히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지표 해석 시 제도적 맥락 고려 필요성을 제기함
 - 이탈리아: 국가 회복 및 복원력 계획(NRRP) 이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지역정부·지방정부 간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는 문제가 주요 병목 요인으로 제기됨
 - 포르투갈: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전 평가 체계의 필요성과 민간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주요 병목 요인으로 제시됨. 최근 발생한 기상이변을 계기로, 에너지·통신·교통·수자원 등 핵심 인프라가 극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복원력(climate proofing)을 강화하는 투자가 핵심 정책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함
 - 폴란드: 'Indicator Compass'를 거버넌스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타 국가와 비교·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점검(checklist) 도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계·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량 및 권한 배분 문제가 공공투자 추진 과정의 핵심 과제로 제기됨. 또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지자체 간 연합 체계와 투자 조정

강화를 위한 계약화 방식이 주요 정책 논의 사항이자 병목 요인으로 언급됨. 아울러 기후 위험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문제가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토론 질문2) 최근 당신 국가의 지방정부 공공투자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추세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 캐나다: 최근에는 주정부(Provinces and territories)가 전체 공공 인프라 투자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교통, 전력, 교육 및 보건 인프라 등 핵심 자산 분야에 대한 지출이 집중되는 추세라고 밝힘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1990년대 분권화 이후 공공투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최근 3년간 통합 디지털 투자 플랫폼과 단일 프로젝트 뱅크(single project bank)를 구축하여 자원 관리의 표준화와 기술·재정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했다고 밝힘. 또한 현재는 AI 분석 등을 활용한 성과 기반 투자 프레임워크(performance-based investment framework)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 일본: 지난 20년간 지방정부로 권한과 재원을 이전하는 분권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평가함.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고속도로, 교통, 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시스템을 유지·최적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탈리아: 최근에는 수자원, 주택, 교육, 의료, 지역 교통 등 국민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 (토론 질문3) OECD가 인프라 및 공공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하나의 통합적 프레임워크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회원국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캐나다: 인프라 관련 기존 원칙과 표준을 보다 실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일관된 프레임워크 아래 인프라 정책을 통합하려는 OECD 및 United Nations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콜롬비아: 복잡한 공공투자 문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 'Indicator Compass'가 매우 유용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지표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함
 - 일본: 'Indicator Compass'가 각국 정책을 공통 기준 아래 객관적으로 비교·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평가함
 - 이탈리아: 'Indicator Compass' 도구가 주택 부문과 같이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

하게 작동하는 특정 분야를 보다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포르투갈: ‘Indicator Compass’를 복잡한 정책 이슈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자 정책입안자를 위한 실질적 체크리스트로 높이 평가함. 다만 단일국가(unitary state)와 연방국가(federal state) 간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아울러 현재 지표가 제도의 ‘존재 여부(existence)’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폴란드: 거버넌스 측정의 공백을 보완한 ‘Indicator Compass’ 이니셔티브와 다양한 조직 간 협력을 이끌어낸 고위급 접근을 높이 평가함. 다만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표가 제도 및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existence)’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실제 정책 ‘효과성(effectiveness)’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스웨덴: 여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학교나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 ‘Indicator Compass’ 지표 체계가 이러한 지자체 간 연합·협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특히 3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투자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평가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협력적 투자 구조를 식별·반영할 수 있는 지표 보완 필요성을 제안함
- 유럽연합(EU): ‘Indicator Compass’와 12대 원칙이 모든 정부 계층 간 보다 효과적인 조정(coordination)을 유도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함. 또한 향후 지역 또는 국가 단위의 투자 챗터 작성 과정에서 회원국과 관련 기관들이 해당 원칙과 ‘Indicator Compass’를 적극적으로 적용·반영할 것을 제안함

<p>Agenda 55th session of the RDPC 22-23 April 2026</p> <p>Day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PC mandate revision and renewal • RDPC draft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 2027-30 • Regional development, security and defence • Regional development in the OECD: managing transitions, disparities and policy trade-offs • Infrastructure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Compass and results of the OECD-CoR survey • Networking event 	 <p>Regional development in the OECD: managing transitions, disparities and policy trade-offs</p> <p>Item 5, 55th Session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22 April 2026, Paris</p> <p><small>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OECD HQ, Paris, France</small></p>
▲ RDPC 의제	▲ Item 5 발표자료

제52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2일차)

1. 회의명

-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Day 2)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3일 (목), 9:30 ~ 17:00
- OECD Room CC10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주열 국장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권유정 과장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박상우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문성윤 자문관
-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과 김종성 과장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박정규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정예은 주무관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신서경 부연구위원
- OECD 사무국 이랑 과장
- 주OECD대표부 김남균 참사관

4. 주요 주제

- 서비스 접근성의 지리적 불균형
- 지자체 간 협력 활용
- 기후 회복탄력성을 위한 수자원 거버넌스
- 부동산 회복탄력성
- 지역 회복탄력성과 재난 관리
- 향후 과업 및 추진 일정 안내, 회의 폐회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7] 서비스 접근성의 지리적 불균형 (09:30-10:30)

- RDPC 의장 발언
 - 서비스 접근성의 지리적 불균형을 RDPC에서 책임 있게 다뤄야 할 핵심 주제임을 언급함
 - RDPC 작업반은 세 가지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후 각국이 방법론과 정책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함을 안내함
- 세 가지 프로젝트에 관한 주제 발표 내용
-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최적화” 프로젝트를 소개함
 - 이 프로젝트는 3년짜리 사업으로, 현재 2년 차에 있으며 학교, 약국, 응급서비스를 중심으로 각국이 서비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조정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서비스가 사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정부의 핵심 수단이지만, 재정 압박, 인구 변화, 디지털 전환,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때문에 단일 시설이나 단일 장소 차원에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함
 - 따라서 서비스 제공을 “네트워크”로 보고, 효율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제시함
 - 구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 프로젝트를 구성함

- * 첫째, 각국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최적 서비스 네트워크”의 의미를 정의
 - * 둘째, 각국이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법·규제·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목록화
 - * 셋째, 각국의 서비스 제공 접근방식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GIS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
 - * 넷째, 학교 폐쇄와 같은 서비스 네트워크 재조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부가 지리통계와 공간데이터를 정책결정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병행 방안 제시
- 두 번째 프로젝트 발표는 서비스 접근성 측정방식을 고도화하는 작업임
 - 기존 분석은 주로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이동시간을 측정했지만, 이번 분석은 시설의 수용능력과 경쟁 정도까지 함께 고려하려는 것이 특징임
 - 에스토니아와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보육, 초등교육, 공공고용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격자 단위와 지자체 단위에서 접근성을 분석했다고 설명함
 - 단순 이동시간만 보면 도시의 접근성이 높고 농촌의 접근성이 낮다는 익숙한 결과가 나오지만, 이것만으로는 정책적 결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따라서 시설의 좌석 수나 등록 학생 수 같은 수용능력, 그리고 같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다른 이용자와의 경쟁까지 반영해 “경쟁적 접근성”을 산출함
 - 이 분석에서는 지역을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 첫 번째 유형은 이동시간도 길고 시설 경쟁도 심한 지역은 이중 불리함을 겪는 지역이며, 두 번째 유형은 이동시간은 길지만 경쟁은 낮은 지역, 세 번째 유형은 이동시간은 짧지만 경쟁이 높은 지역으로 상충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고 발힘
 - * 네 번째 유형으로 이동시간도 짧고 경쟁도 낮은 지역은 접근성과 공급여건이 모두 양호한 지역을 정의함
 - 더불어 네덜란드는 이중 불리함을 겪는 지역의 공간적 편차가 작았지만, 에스토니아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중 불리함이 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함
 -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항상 해법은 아니며, 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 접근성만 높이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시설에 몰려 오히려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함
 - 세 번째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와 협력해 추진한 기능적 농촌지역 및 농촌 일상생활권 정의 작업임
 - 이 작업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일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바탕으로 농촌 생활권을 파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임

-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는 국가마다 크기와 구조가 크게 달라 국제비교에 한계가 있고, 기능적 도시지역은 잘 정립되어 있지만 도시지역 밖 공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기능적 농촌지역은 TL3보다 작고 지방행정단위보다는 큰 중간 규모의 공간 단위로, 국제 비교 가능성과 지역 분석의 세밀함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도구로 설명함
- 끝으로 발표에서는 기능적 농촌지역 방법론을 노동시장권, 기능적 도시지역, 서비스 입지 기반 접근 등과 비교한 결과를 설명함
- 사례로는 이탈리아의 인터넷 속도에서 도시-비도시 격차가 중간 규모 공간 단위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 기능적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면 외국인 인구 분포나 주택시장 분석이 더 풍부해진다는 점, 독일의 도서지역 기능적 비도시지역이 일반 농촌지역과 다른 주택시장 특성을 보인다는 점, 병원 접근성 분석에서 농촌성 정도와 국가별 밀도 차이에 따라 45분 이내 병원 접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제시함
- 소개한 프로젝트는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며, 각국의 국가별 지표를 적용해 기능적 비도시지역 방법론의 정책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2) [Item 8] 지자체 간 협력의 극대화(활용) (10:30-11:30)

- RDPC 의장 발언
 - 지자체 간 협력은 지방정부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다만 실제로 지자체 간 협력을 추진해 본 국가들은 알 수 있듯이, 협력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강한 전제조건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의제 논의를 시작함
- 주제 발표 내용
 - 발표는 “Making inter-municipal cooperation work”라는 초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함
 - 발표는 지자체 간 협력이 단순한 행정기술이 아니라, 공공행동을 적절한 공간적 규모에서 조직하고 서비스 전달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함
 - 특히 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 고령화, 재정 압박, 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책임 증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별 지자체 단위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넓은 기능적 공간 단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해당 보고서는 44개 OECD 및 일부 가입 후보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층거버넌스 전문가그룹 논의와 리투아니아의 공유 공공서비스 관련 TSI 프로젝트 경험도 반영함

- 발표는 지자체 조직의 현재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함
 - * 첫째, 많은 국가에서 지자체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점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약 4분의 1의 지자체가 2천 명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음
 - * 둘째, 규모가 작은 지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여러 지자체가 인력 부족, 예산 압박, 전문성 부족,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복합적 책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
- 이러한 역량 부족에 대응하는 선택지로 해당 보고서는 네 가지를 제시함
 - * 첫째는 아웃소싱 둘째는 지자체 통합 셋째는 비대칭적 분권 넷째, 지자체 간 협력
- 지자체 간 협력의 장점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고, 이러한 협력은 지자체가 자율성과 시민과의 근접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규모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한다고 발언함
- 또한 자원, 인력, 장비,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비용을 줄이며 행정·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더 나아가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공동계획과 공동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OECD의 다층정부 간 효과적 공공투자 권고와도 연결함
- 그러나 발표에서는 지자체 간 협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 협력체가 새로운 거버넌스 층위를 만들면 행정 복잡성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책임 배분이 불명확하면 중복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힘
- 협력 참여 지자체 간 역량 차이는 권력 불균형을 만들 수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 또한 협력이 항상 재정 효율성이나 비용절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력은 신중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함
- 요컨대, 발표는 효과적인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 세 가지 기반이 필요하다고 정리함
 - * 첫째는 법적 기반, 둘째는 제도적 기반, 셋째는 재정적 기반으로 요약
- 발표 말미에서는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공정한 대표성, 지자체장 간 지속적 대화, 단계적 추진, 상호신뢰 형성, 투명성, 책임성, 시민 대상 정보 제공, 공통 지표와 정기 보고를 통한 성과관리도 강조함

(3) [Item 9] 기후 회복탄력성을 위한 수(水)자원 거버넌스 (12:00-12:45)

- RDPC 의장 발언

- 2015년 RDPC가 OECD 수자원 거버넌스 원칙을 승인했고, 이 원칙이 이후 OECD 물 관련 이사회 권고에 포함되었다고 소개함
- OECD 관련 작업반은 지난 10년간의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UN 물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주제 발표 내용

- 발표의 핵심은 물 문제가 더 이상 환경정책이나 인프라정책의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개발, 산업정책, 사회통합, 공간계획, 회복탄력성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설명함
- 발표는 OECD가 약 15년 동안 RDPC와 관련 작업을 통해 물을 지역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다뤄 왔으며, 이 작업은 RDPC뿐 아니라 환경정책위원회, 농업위원회, 규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가로지르는 수평적 의제라고 설명함
- 또한 수자원 안보의 위협을 네 가지로 구분함
 - * 첫째는 홍수처럼 “물이 너무 많은” 위협이고, 둘째는 가뭄처럼 “물이 너무 적은” 위협, 셋째는 수질오염 문제이고, 넷째는 식수와 위생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문제라고 밝힘
 - * OECD 국가들은 현재 식수와 위생서비스에서 보편적 접근에 가까운 수준을 달성한 경우가 많지만, 인프라 노후화와 자원 부족으로 앞으로도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함
- 발표는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강화하고, 주요 경제·인구 중심지가 하천 범람과 가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인구증가 도시는 물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인구감소 지역은 기존 물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이중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함
- 도시 확산과 토지이용 변화는 홍수 노출을 높이고 지하수 함양을 줄여 물 리스크를 더욱 키운다고 지적함
- 다음으로 물 문제가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산업전환, 인구전환과도 직접 연결된다고 강조함
- 데이터센터는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인데, 상당수가 이미 물 리스크가 높은 유역에 입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배터리 생산과 청정기술 제조도 안정적인 수자원을 필요로 하며, 반도체 같은 전략산

- 업 역시 막대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 부족 지역에 입지할 경우, 산업정책과 수자원정책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물 네트워크가 과잉 규모로 남아 재정 부담과 유지관리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이유로 OECD 관련 작업반은 수자원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강조함
 - 즉, 물 문제는 행정구역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농업, 보건, 산업, 도시계획, 환경 등 여러 부문을 동시에 가로지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물 관련 책임은 지방으로 빠르게 이양되는 반면, 자원과 역량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수자원 부문은 자본집약적이고 지역성이 강하며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이므로, 규제와 거버넌스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발표에서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물 안보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네덜란드처럼 물 관리 역량이 높은 국가에서도 담수 공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브라질 사례처럼 지역 수자원 거버넌스 실패가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 간 긴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반대로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사례처럼 행정·영토 개혁은 물 서비스의 효율성, 조정,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OECD 수자원 거버넌스 원칙은 이러한 공통 병목과 해법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각국 정부가 부처 간, 정부 수준 간 물 거버넌스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12가지 필수 사항”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설명함
 - 이후 OECD는 지표체계, 10단계 자가진단 가이드, 현장사례 핸드북, 역량강화용 교육자료 등을 개발했고, 최근 조사에서는 100개 이상의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이 원칙과 관련 자료를 일상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함
 - 이번 글로벌 조사는 이러한 원칙이 여전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작업이며, 글로벌 조사가 OECD 및 가입 후보국의 지난 10년간 물 거버넌스 개혁을 되돌아보고, 현재 글로벌 물 거버넌스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즉, 부실한 거버넌스의 비용과 좋은 거버넌스의 편익을 수집하고, 향후 물 회복탄력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 각국 설문과 기술적 논의, OECD Water Governance Initiative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UN 2026 물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4) [Item 10] 부동산 회복탄력성 (14:15-14:45)

- RDPC 의장 발언

- 기후 관련 위험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와 전체 경제의 금융위험으로 전환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소개함
- 관련 연구는 프랑스 생태전환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부동산을 단순한 건축물이나 주거 문제가 아니라 지역개발과 경제 안정성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접근했다고 설명함

- 주제 발표 내용

- 발표는 「Future-proofing real estate investment: place-based risk」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소개함
- 해당 보고서는 2025년 12월에 발간된 것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43개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와 네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작성함
- 발표의 출발점은 기후재난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함
- 가장 먼저 호주 사례를 제시하였고, 호주는 2030년까지 25개 부동산 중 1개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함
- 발표자는 이것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급되는 건축허가의 생애주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함
- 또한 프랑스의 폭염과 가뭄,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일본의 홍수 피해 등 여러 사례를 들며, 기후재난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가속화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 부동산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 자산 규모와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발표는 OECD 경제에서 부동산 부가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며,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이 가계자산과 지역경제 안정성의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함
- 부동산은 수명이 길고, 가계와 기업에 큰 자본투입을 요구하며, 홍수, 폭염, 폭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직접 노출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피해를 입으면 자산가치 하락, 보험 불가능성, 금융비용 상승,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함
- 발표의 중요한 메시지는 기후위험이 “지역 기반”이라는 점으로, 같은 국가 안에서도 홍수위험이나 폭염위험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며, 어떤 지역은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 그러나 실제 계획과 투자 결정은 여전히 너무 넓은 공간 단위의 집계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발표자는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세밀한 부동산 단위 위험자료의 부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함
- 정부는 모든 분석도구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미 보유한 재해위험 자료를 개방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지역화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더불어 부동산 회복탄력성이 단일 행위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함
- 그 이유는 개발업자, 건설사, 부동산 관리자, 가계, 정부, 규제기관, 대출기관, 보험사, 재보험사,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이 모두 같은 위험의 서로 다른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즉, 이들이 각자 다른 기준과 언어로 위험을 평가하면 위험관리의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에서 재난이 경제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섯 가지로 정리함
 - * 첫째, 기후위험은 이미 부동산의 자산가치, 현금흐름, 금융비용, 보험 가능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둘째, 위험은 본질적으로 장소 기반이며, 입지는 장기 성과와 자산좌초 위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됨
 - * 셋째, 시장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관된 기후위험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함
 - * 넷째, 보험 접근성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더 제한되고 불균등해지고 있다고 밝힘
 - * 다섯째, 기준과 공시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어 부동산 금융의 국제적 성격에 비해 효율적인 자본배분이 어렵다는 점을 밝힘
- 이에 따른 권고도 네 가지로 제시함
 - * 첫째, 고위험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것을 피하고, 계획과 투자 결정에서 기후위험을 명확히 보이게 해야함
 - * 둘째, 상호운용 가능하고 지역화된 위험데이터와 공시체계를 발전시켜야 함
 - * 셋째, 개보수, 적응, 보호 인프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함
 - * 넷째, 기후위험의 측정과 보고를 위한 국제 기준을 발전시켜야 함
- 후속 일정으로 OECD 지속가능건축 라운드테이블을 소개하였고, 해당 회의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희망지는 12월 2일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에도 참

석할 수 있다고 안내함

- 후속 일정의 주요 논의 주제는 건축물 전 생애 탄소, 에너지효율 조치의 비용효과성, 시각화와 스마트빌딩, 회복탄력적 건축물이며, 회복탄력적 건축물 세션에서는 물리적 기후위험과 각국 정부의 대응을 더 깊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5) [Item 11] 지역 회복탄력성과 재난 관리 (14:45-15:00)

● RDPC 의장 발언

- 이 안건이 RDPC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요청, 즉 비상상황 관리와 장기적 충격 회복력 구축에 대해 더 강한 분석 지원과 회원국 간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함
- 이러한 요구는 2025년 RDPC 의장 성명에도 반영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OECD의 “지역 재난 회복탄력성 플랫폼” 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개함

● 주제 발표 내용

- 발표는 먼저 OECD 국가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산불, 홍수, 팬데믹, 무력분쟁 등 다양한 재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기상 관련 재난은 지난 50년 동안 약 5배 증가했으며, 재난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제 피해와 대응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 조건, 인프라, 사회적 역학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고 강조함
- 최근 OECD 연구에 따르면 극한 기상 현상은 지역 GDP를 평균 2.2% 감소시킬 수 있고, 그 손실 중 약 1.7%는 5년 후에도 남아 있으며, 피해 중심지에서 100km 이내의 인접 지역도 GDP가 최소 0.5%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발표는 재난 회복탄력성 정책에서 “장소 기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고, 이는 지역별 노출 정도, 취약성, 대응 역량을 고려하고, 지방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함
- 지방정부는 핵심 인프라 제공, 긴급서비스 지원, 재건 계획 수립에서 최전선에 있지만, 실제로는 권한 배분, 재정 지원, 책임 구조가 불명확하거나 분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또한 OECD가 이 플랫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국가별 보고서와 주제별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예시로 2023년 튀르키예 남부 지진 이후 재건,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 이후 복구, 우크라이나 관련 작업, 수자원 관리, 도시 위험, 재정 회복탄력성 등의 기존 연구를 언급함
- 발표는 이 작업들로부터 세 가지 핵심 교훈을 도출함
 - * 첫째, 지역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 둘째, 어느 한 정부 수준이나 단일 행위자만으로는 재난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재난의 유형과 규모는 다르더라도 거버넌스 문제는 책임 분절, 자원 부족, 조정 한계 등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
- 이와 더불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두 가지로 제시함
 - * 첫 번째는 지식 제공, 정책 지침, 동료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 두 번째는 재난 발생 시 전문가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 참여 방식으로는 플랫폼의 실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온라인 자료집에 우수사례를 제공하는 것, 위기 시 동원 가능한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 주제별 연구나 동료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제안함

(6) [Item 12] 향후 과업 및 추진 일정 안내, 회의 폐회 (15:15-15:30)

- RDPC mandate 관련 후속 절차
 - 의장은 RDPC mandate 문안에 대해 전날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함
 - 특히 “data-directed evidence”라는 표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다만 여성과 남성 간 불평등, 기후변화, 저탄소경제 전환 등 일부 표현은 아직 합의되지 않아 대괄호로 표시된 상태라고 설명함
 - 의장은 여성과 여아의 평등 증진을 가로막는 장벽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절충 문안을 제안함
 - 미국은 이 문안이 mandate에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후 PWB와 구체적 산출물에서 해결 방안을 다루는 방식과 부합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힘
 - 그러나 프랑스와 멕시코 등은 본국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멕시코는 24시간 내 피드백을 요구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문제를 제기함
 - 이에 의장은 최종 문안을 회람하고,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각국이 동의 여부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 다만 시간상 협의가 어려운 국가는 입장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문안은 대괄호로 남겨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독일은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복원”이 OECD의 핵심 가치이므로

mandate 문안에서 쉽게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 사안은 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 PWB 추진 일정

- 의장은 PWB, 즉 Programme of Work and Budget와 관련하여 5월 중 우선순위 설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함
- 5월 7일까지 Rev. 2 버전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며, 담당 작업반은 이번 위원회 논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함
- PWB는 5월 말 승인 절차에 제출될 예정이며, 6월 17일 예산위원회 일정과도 연결되어 있어 내부 절차상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고 설명했고, 따라서 각국 대표단의 신속한 검토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함

- OECD 가입 심사 관련 업데이트

- 의장은 OECD 가입 절차와 관련한 RDPC의 역할도 간략히 설명함
- RDPC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페루, 루마니아의 가입에 관한 공식 의견을 채택했으며, 이들 국가는 전체 OECD 가입 절차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브라질의 가입 절차는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고, 한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태국에 대해서는 OECD 내 26개 기술위원회가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며, RDPC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에 대해 2027년 봄 첫 기술 논의를 진행하고, 태국은 그 이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안내함

-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 의장은 이번 회의 동안 문서 배포 시기, 논의 일정, 대표단 참여 방식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언급했고, 이에 따라 RDPC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우선 Bureau 차원에서 운영 방식 개선안을 논의한 뒤, 차기 RDPC 회의 전까지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대표단에 제시하겠다고 설명함

-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RDPC 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이 시작되는 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안내함
- 해당 주간에는 RDPC 본회의뿐 아니라 모든 작업반 회의와 다층적 거버넌스 전문가

룹 회의가 함께 열릴 예정으로 즉, 차기 회의는 RDPC 관련 주요 작업반과 전문가그룹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 회의 주간으로 계획되었다고 설명함

● 회의 폐회 발언

- 의장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기뻐했다고 밝히며, 대표단이 매우 어려운 쟁점들을 다루었음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함
- 일부 사안은 아직 위원회 밖에서 추가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이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한 점에 감사를 표함
- 또한 의장은 회의 중 진행된 여러 주제 발표와 토론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통역진의 노고에도 별도로 감사 인사를 전함
- 끝으로 참석자들에게 귀국길의 안전을 기원하며, 향후 온라인 및 대면 방식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발언함
- 폐회 직후 한 대표단이 최종 문안 공유 시점을 질문하자, 의장은 해당 문안이 곧바로 온라인에 게시될 것이라고 답하였고, 이에 따라 회의는 문안 후속 검토와 각국 내부 협의를 남겨둔 채 RDPC 2일차 회의를 공식적으로 종료함

현장 견학: 프랑스 도시정책 사례

1. 활동명

- (현장 견학) 프랑스 도시정책 사례: 도시 재생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4일 (금), 09:00 ~ 11:30
- 앙드레 시트호엥 공원 (Parc André Citroën)

3. 참석자

- 양은모 부연구위원

4. 주요 내용

- 제39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와 제55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지역이 직면한 그린전환 및 산업전환 관련 정책 개발과 관련한 주요국 사례 공유가 이루어짐
- 따라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산업유휴부지 재생 및 공공공간 중심 도시 재생) 사례 현장을 견학하여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앙드레 시트호엥 공원 (Parc André Citroën)은 은 프랑스 파리 15구에 위치한 대규모 도시공원으로, 프랑스 내 산업쇠퇴지역 재생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됨
- 해당 부지는 18세기 현재까지도 인지도가 높은 소독수 ‘자벨 (Javel)’을 생산하던 장소였으며, 앙드레 시트호엥(1878-1935)이 1915년 이곳에 군수공장을 설립하고, 1919년에는 그의 이름을 딴 자동차 기업인 시트호엥 (Citroën)의 자동차 공장 부지로 사용되었음
- 이후 생산시설이 이전되면서 공장은 1976년 폐쇄되었고, 이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지역 중심부에 현재의 넓은 공원이 조성됨. 이는 산업용 토지를 재개발하여 조성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음

- 20세기 후반 유럽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파리 역시 제조업 쇠퇴와 공장 이전으로 인해 도심 내 대규모 유허 산업부지를 경험하였으며, 씨트호엥 자동차 공장 이전 이후 파리는 해당 지역을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대규모 공공녹지 공급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함
- 이 공원은 1992년 개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여러 휴식공간이 추가되면서 공원이 확장됨. 총면적은 약 14ha 규모이며, 건축가 알랭 프로보스트(Alain Provost), 질 클레망(Gilles Clément), 패트릭 베르제(Patrick Berger) 등이 설계에 참여함
- 또한 1990년대 조성 당시 진보적인 생태설계를 반영한 공원으로 평가되며, 공원 조성을 통해 대규모 녹지 확보에 따른 도시열섬 완화, 다양한 식생 도입,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창출함
- 이 공원은 20세기 후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며, 센강(Seine River) 인근에 입지하여 다양한 테마 정원, 유리온실, 대규모 잔디광장, 수경시설 등을 통합한 현대적 도시공원의 형태를 보여줌
 - 특히, 산업유산 철거 이후 도시의 중심 가치를 공공녹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로 평가됨

